

2018년 정부 업무보고

-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18. 1. 18.



2018년 정부 업무보고

목 차

고 용 노 동 부

중 소 벤 처 기 업 부

보 건 복 지 부

농 립 축 산 식 품 부

해 양 수 산 부



고용노동부

**“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18.1.18(목)

- I. 추진배경 및 정책방향
- II. 정책 추진과제
- III. 추진체계
- IV. 업무혁신 과제(현장 노동청 운영)

고용노동부
2018 업무보고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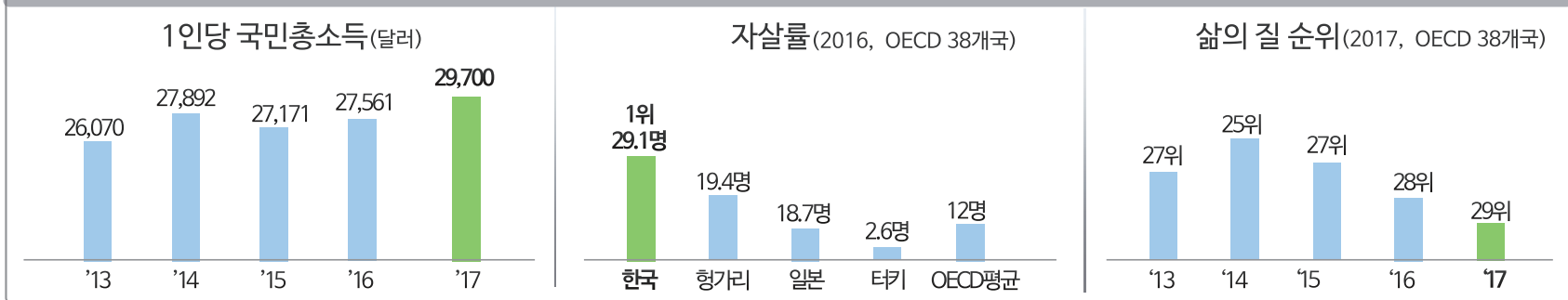
추진배경 및 정책방향

1. 우리나라 삶의 질 현황
2. 노동 현장의 목소리
3.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4.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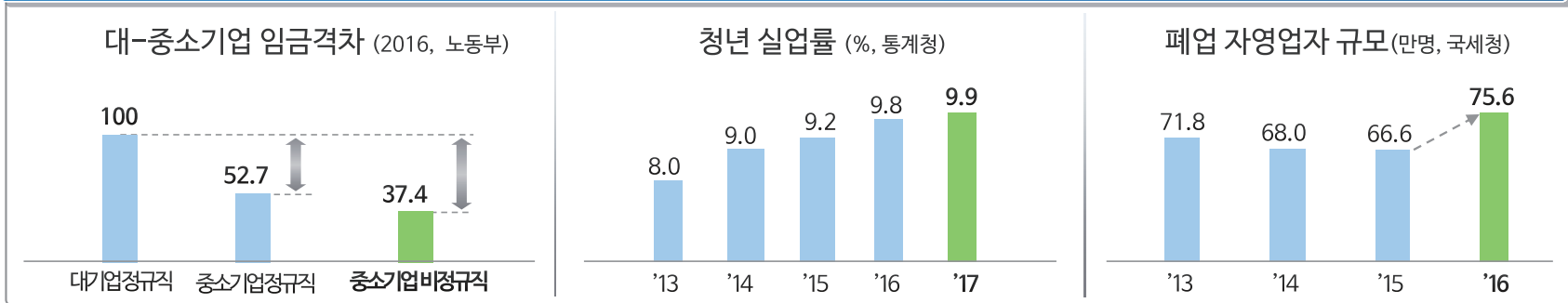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삶의 질' 현황

(2017년 기준, 일부 지표 제외)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



그간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였기 때문



➔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국정전략으로 설정

노동 현장의 목소리

지난해, 17일간 전국 10곳에서 '현장 노동청' 운영('17.9.12~28),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제안 채택율: 65.7%, 진정 처리율: 82.0%)



노동자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장시간근로를 개선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희망 합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구직자

“대학 3학년 재학생입니다. 내년 졸업이 두렵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마련과 지원에 노력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을 충분히 받고 싶습니다.”



영세사업주

“대형마트가 주변에 많이 생기면서 고객이 많이 줄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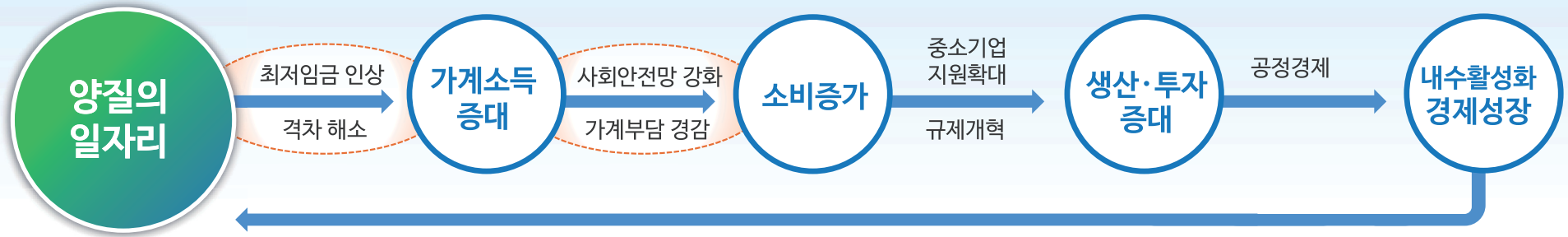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가 많아 사업 경영이 힘듭니다.”

이제, 국민들은 삶의 변화를 희망

▶ '사람중심 경제'의 국정철학을 실천하고, 노동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 연결고리’



문재인 정부 핵심 전략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 및 핵심 생계비 감소 등
가계부담 경감으로 소비 및 내수 확대 지원 필요

또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려면

- 규제 개혁, 산업 혁신 및 신산업 활성화,
융합형 인력 양성 등 ‘혁신성장’과의 연계도 필수적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향후 과제

'17년 성과

(1단계)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

-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국정 최우선 순위
 - 일자리 위원회 신설(위원장: 대통령)
 - 일자리 로드맵 발표
-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틀 마련

[최저임금 인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17년 목표 7.4만명 전환 결정 완료('18.1월 기준)

'18년 계획

(2단계) 소득주도성장 확산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격차' 해소

- 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
-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격차해소

일을 찾는 구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 기회 확대
- 청년·신중년 등 맞춤형 취업 지원
- 직업훈련, 고용·산재 보험 등 안전망 강화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 장시간 근로 개선
-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일과 생활의 균형

Ⅱ

정책 추진과제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 :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8년 236만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지원요건**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 1개월이상 고용 유지 노동자
- 지원금액** 1인당 13만원 지원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범정부적 홍보

고용부

-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팀 지역단위 사업주 밀착 홍보

중기부

- 지방청별 현장홍보 전담반 기업 방문·안내

행안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지자체별 TF, 읍면동 전담인력)

쉽고 편리한 신청

- 신청·접수 특별기간 운영 ('17.12월 ~ '18.2월)
- 전국 4천여개 오프라인 창구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운영
- 신청 업무 무료 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두루누리) 확대
* (대상) 월 보수 140만원 → 190만원 (수준) 보험료의 60% → 80~90%
- 건강보험료 50% 감면
- 4대 보험 신규 가입시 2년간 세액 공제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 : 최저임금 안착 지원

최저임금 준수 지도

-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 가동 ('18.1월~)
 - 모범 사업장 발굴·확산
- 쉼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18.1월~)
 - 불법·편법적 임금인상 사례 시정
- 취약업종 대상 3주간 ('18.1.8~1.28) 계도 후 집중 점검 ('18.1~3월)
 - 아파트, 편의점, 주유소 등 5천개소



최저임금 제도개선

- 「최저임금 委員會」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추진



-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 ▲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 ▲ 산입범위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분배개선효과
- ▲ 결정구조·구성
- ▲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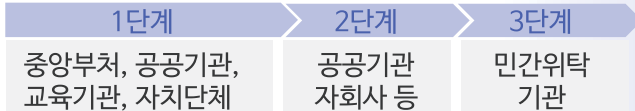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비정규직 규모 감축 및 차별해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속화

- 1단계 대상기관은 빠른 시간 내 전환 추진 ('17~'18년, 누적 15만명)



- 표준인사관리규정('17.12월 발표) 및 임금체계 표준모델 마련 (노사단체 협의 중)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 사용사유 제한,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채용 ('18년~, 기간제법 개정 추진)
- 고용형태 공시제 개선
 - 소속 외 노동자 업무내용 공시
-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재정·세제)

불합리한 차별 해소

- 차별시정제도 개편
 - * 비교대상 노동자 범위 확대, 차별처우의 합리적 사유 축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고용
형태별

기업
규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해소

-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방안」 마련
(예) 하청 노동자 적정임금·산업안전 관리의 원청 책임 강화

- 관계부처 합동단속·점검 (계속)
 - 하도급 관행(부당한 대금인하 등)
 -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이행 여부 등

- 원·하청 등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장·단기 실행 로드맵 마련 (관계부처 합동)

공정거래

- 적정 납품단가 보장
-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엄정 대응

상생협력

- 대·중소 동반성장 지원 강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고용노동부
2018 업무보고

Ⅱ

정책 추진과제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기회 확대

“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 ”

대통령 신년사('18.1.10)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5.6만명, 2천억원)
- 산업단지 환경개선 * 참여부처(4 → 7개), 사업(9 → 20개)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18년 1천여개소)· 정보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 혁신적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550팀)
- 「판로지원 특별법」 제정(국회 계류중)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민간기업 고용 창출 분위기 확산

- 고용의 양과 질이 우수한 기업 선정·인증(약 110개소, '18.5월)
- * (가칭) 고용창출 모범기업, 좋은 일자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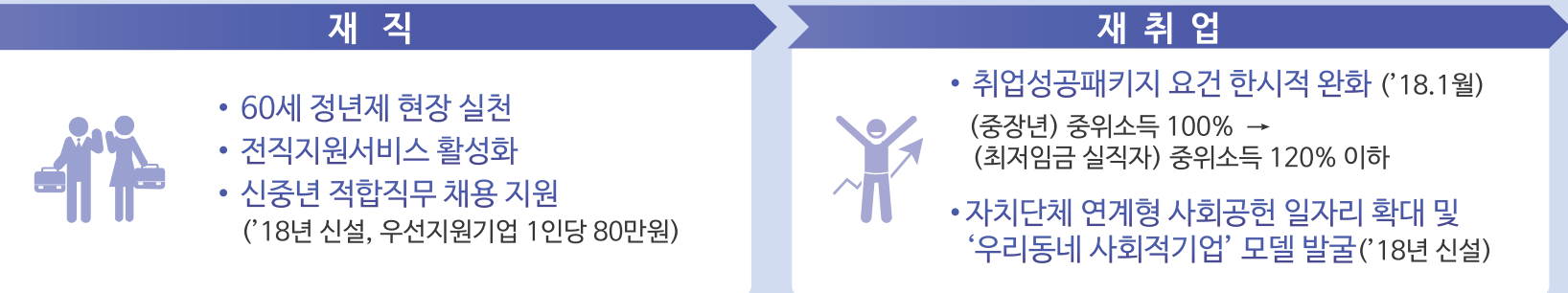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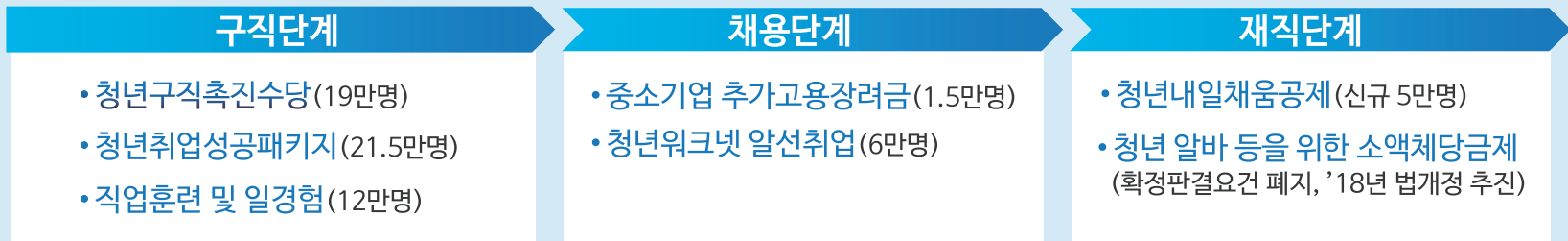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신중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



'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 ⇒ 향후 3~4년간 집중 지원

-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 청년과 함께하는 홍보로 사업 참여 유도 (청년 참여단, SNS, 학생회 연계 등)
- 일자리 단계별 밀착 취업지원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형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신기술·신산업 훈련 확대

- 빅 데이터, IoT 등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산('18년 1천명)
- 중소기업 노동자 참여확대 (인센티브 강화)

공공부문 역할 강화

폴리텍

- 신기술·융합학과 중심 학과 개편 (매년 3개 신기술 학과 신설)

한기대

- 훈련교사 역량 개발, 소통형 훈련, 차세대 콘텐츠 개발 등 훈련 혁신

미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 유망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 및 자격종목 신설
* 로봇SW개발, 3D 프린터 등
- 신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실업자 훈련

- 실업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또는 복귀 지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폴리텍 기능사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재직자 훈련

-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미래변화 대응 훈련
* 사업주 훈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등
- 산업구조 변화, 노동자 수요 등을 반영한 전직훈련
* 전직지원 상담 강화 및 적합 훈련과정 연계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18.上 법개정, '19년 중 시행)
* 고용보험 제도 개선 전문가 TF 및 노사정 TF 논의 중 ('18.1~3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18.1월~, 창업 후 1년 이내 → 5년 이내)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 [급여확대] 지급수준 인상(50→60%) 및 지급기간 연장(30일 이상) *'18.7월~
* 보험료율 조정 병행(노사 각 0.15%p 상향, '19.1월~)
- [대상확대]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18→ 24개월, '18.7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단계적 확대 ('18.7월~)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출퇴근 재해] 업무상 출퇴근 재해 인정('18.1월~)
- [사각지대 해소] 특고 종사자,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적용 추진
- [보장성 강화]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완화(과로 인정기준 60시간 → 52시간)



Ⅱ 정책 추진과제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
-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 3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 개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대통령 신년사('18.1.10)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추진

- 1주 68시간 → 52시간
- 연장근로한도 미적용
특례업종 축소
(26개 → 10개 우선 추진)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

- * 장시간근로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지도·감독 강화

- * 주요 장시간 노동 업종,
노동시간특례업종 등
집중 근로감독(600개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 노동자 신규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 ('18년 213억)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일·생활 균형 실현

- 일하는 문화·방식(정시퇴근 등) 혁신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설('18.下, 국회제출)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 휴식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대국민, CEO 인식개선 캠페인
 -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례 확산 등

- 휴일·휴가제도 개편 방안 마련 ('18.6월)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시범 설치 ('18년 3개소)
- 민간 직장어린이집(매년 135개소 이상)

• 육아지원 확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18.7월~)

첫째아 150 → 200만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추진('19년)

6개월 이상 근무 시 허용(기존 1년, '18.7월)

대체인력 지원 확대('18.6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연장 및 급여인상

최대 1년 → 2년

임금의 60% → 80%

고용노동부
2018 업무보고

Ⅲ 추진 체계

1. 정책 추진 기반 마련
2. 국민에게 다가가는 고용노동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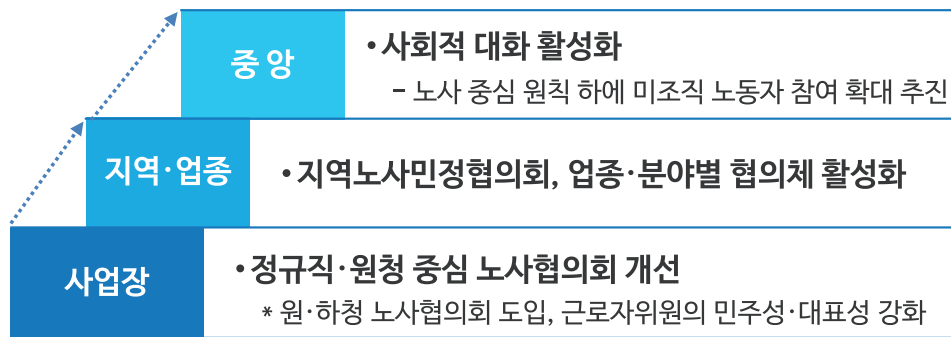
정책 추진 기반 마련

사회적대화 활성화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

- 대통령 신년사('18.1.10)

중층적 대화체제 구축



90%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 이해대변·권익보호

• 관련 단체 소통 정례화, 인프라 구축 및 정책 개발 연계

일자리 중심 정부 정책 확산

고용영향평가 확대·강화

대상

• 일자리사업(전체), R&D, SOC, 조달사업(100억원 이상), 제·개정 법령('19년 시행 추진)

결과활용

• 고용효과 높은 사업에 예산 우선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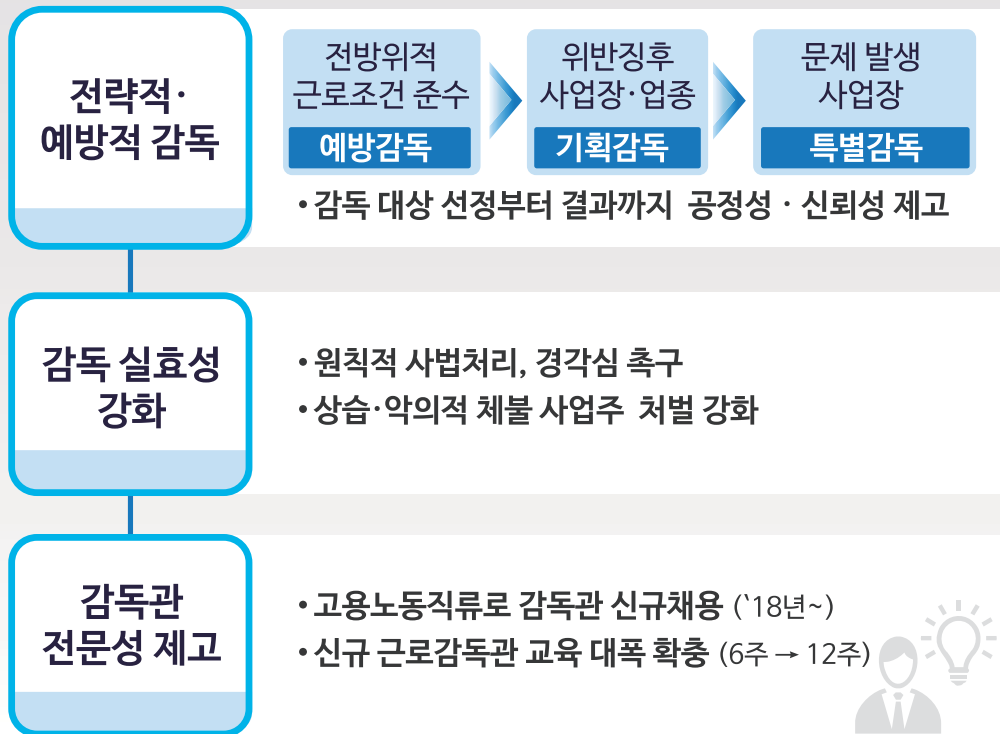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 '17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구조 개편 등 효율성 제고
-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강화 (1/4분기 34.5% 이상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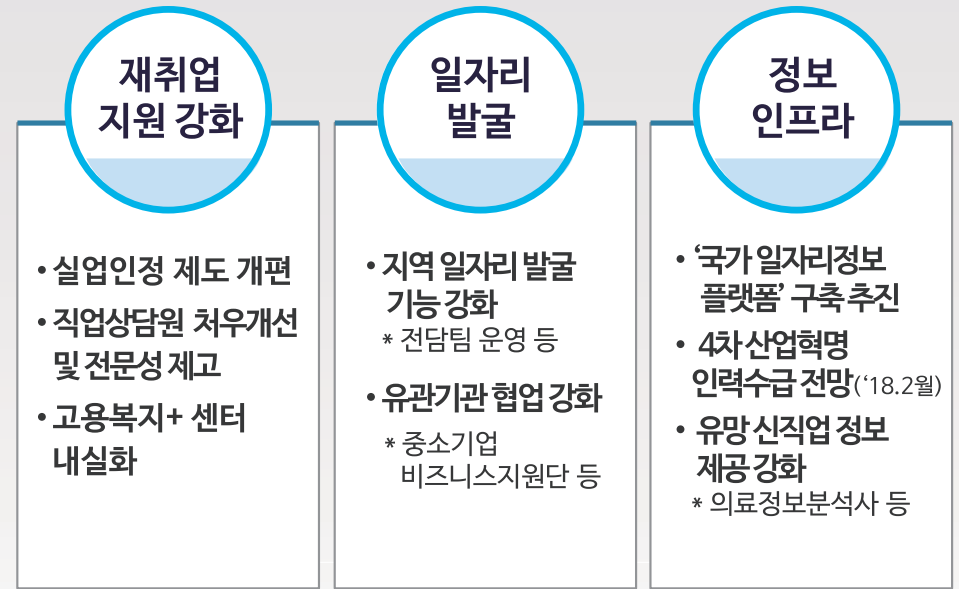
현장 중심 일자리정책 추진

- '고용노동 상황판' 본격가동
- 주요 현안 실시간 관리

근로감독행정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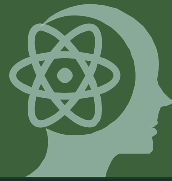


고용센터 혁신



취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2018 업무보고



업무혁신 과제

- 현장 노동청 운영



2017

2017 현장 노동청

현장노동청의 의미

진정, 고소·고발 사건 등
실제 문제가 발생한 **後**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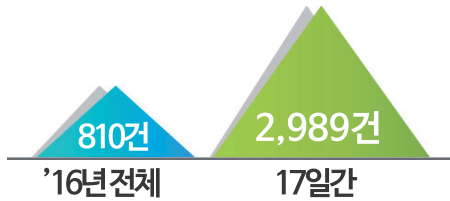
도입 후

임금체불, 노사분규, 산재사고 등
문제 발생 **前** 사전 예방

전국 10곳, 17일간의 운영성과

■ 제안·진정 및 현장상담 6,271건

■ 국민제안 2,989건



■ 제안·진정건의 높은 채택·처리율

제안 **65.7%**

진정 **82.0%**

■ 진정 처리기간 대폭 단축

일반진정 **44.6일**

현장진정 **26.3일**

2018

Re~start 현장 노동청

매년 5월 정기적 운영

분야

- 고용노동행정 전 범위
- 특히 청년층 집중

방식

- 정책 대상, 지역별·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 지역·기간 등 탄력적으로 운영

제안 및 진정의 신속한 처리

- e-현장노동청 운영
- 신청된 제안은 신청인에게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통보



**‘일자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천하여,**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2018. 1.18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순서

1 국민경제와 중소기업

2 2018년 중소기업 정책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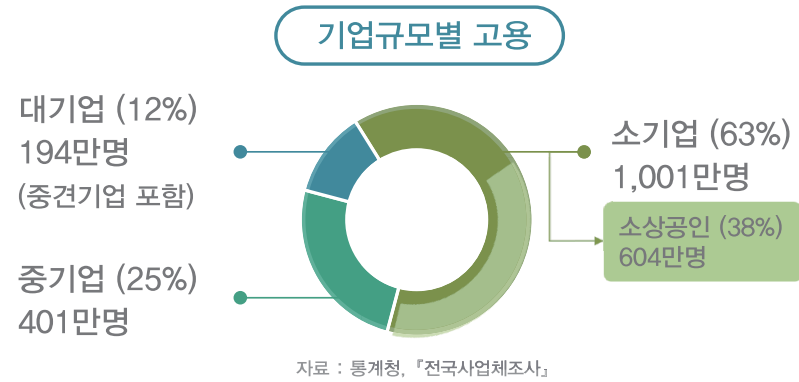
3 2018년 중점 추진과제

- ①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강화
- ②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매출·소득 증대
- ③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
- ④ 정책 및 업무혁신

1. 국민경제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삶과 활동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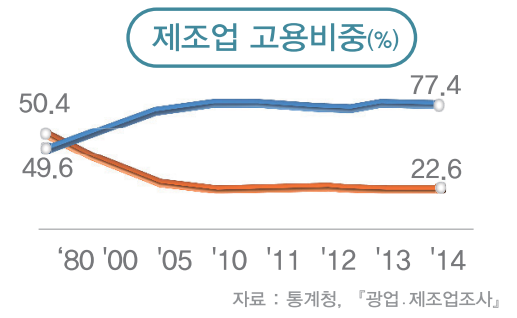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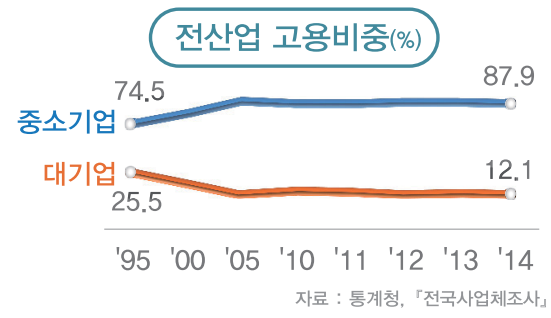
중소기업 1,402만명
對
대기업 194만명 근무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

중소기업 일자리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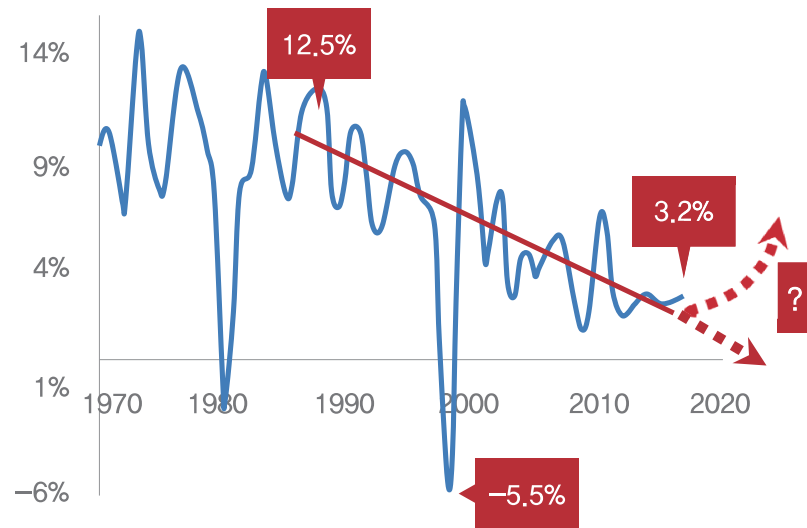
반면,
대기업 고용비중 지속 감소
(95년 : 25.5% → 14년 :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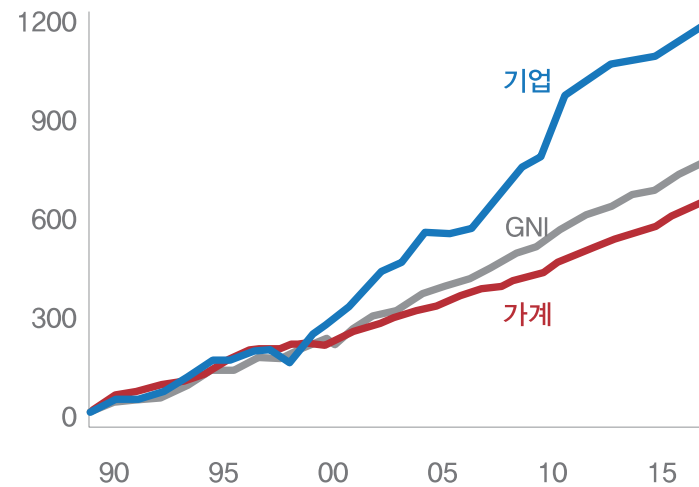
【지금 우리의 모습】

세계화 · 기술진보 이후 저성장,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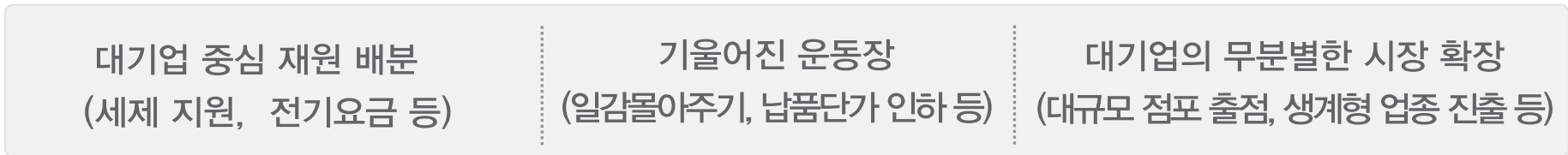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추이(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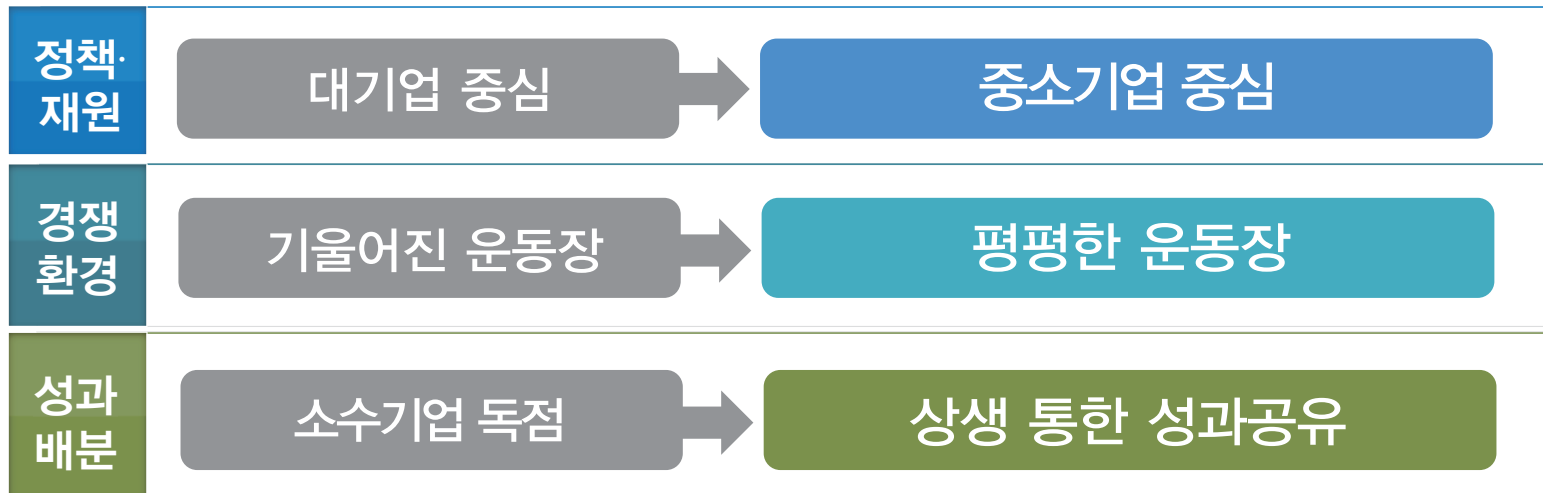
기업-가계 간 소득증가 추이('90년=100, 한은)



대기업 중심 경제에 따른 중소기업 독점으로 환경변화 대응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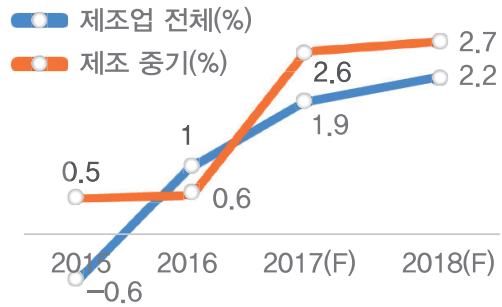
➔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여 추세를 바꿀 필요**



2. 2018년 중소기업 정책 여건

경기 전망 : 성장세

중소제조업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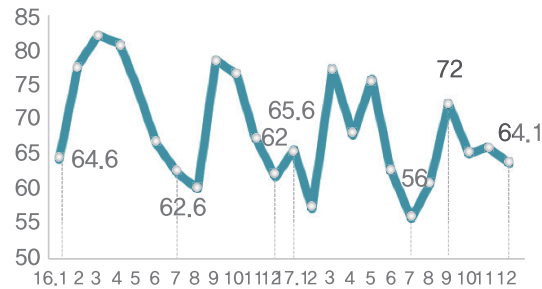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중기연

국정과제 실천 등을 통해
성장 전망을 현실화

업 계 : 체감도 정체

소상공인 BSI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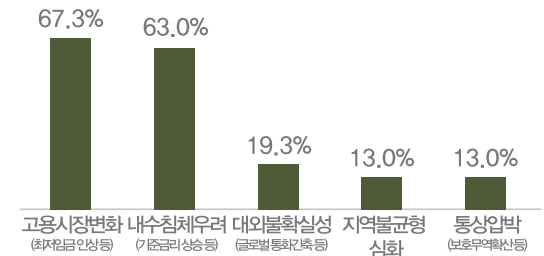


* 자료 : 소진공

정책성과 창출 등을 통해
현장 체감경기를 호전

도전 요인

-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상 등



* 자료 : 중기중앙회('17.12)

현장소통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

중소 · 벤처 · 소상공인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성과 달성 추진

3. 2018년 중점 추진과제

중기부 주관 : 5대 국정과제, 21개 세부실천 과제 ⇒ 차질없이 실행

격차완화 통한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창업국가
조성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대·중기
상생협력

일자리·소득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번 보고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4개 과제 보고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

4대
과제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매출·소득증대

중소기업 정책 및 업무혁신



첫째

중소 · 벤처 · 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창업·벤처는 일자리 원천, 그러나 일자리 지속창출을 위한 창업 생태계 미흡

**창업·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 창업기업 연평균
119만명 일자리 창출
(05~14년, 사업체통계조사, 창업경영연구원)

**우수인력
창업저조**

* 석·박사급
창업 비중 **5.3%**



**선진국 대비
벤처투자 저조**



미국 0.37 중국 0.28 영국 0.18 한국 0.13
* GDP 대비 투자 비중(%)

**재도전걸림돌
상존**

* 연대보증 등
* 폐업 기업 대표자 부담
3.6억원 (17년, 중기부)

→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면 개편

- 실천과제

- ① 일자리 중심 정책개편
 - ② 창업 활성화
 - ③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
 - ④ 재도전 지원



실천과제 1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 적극 뒷받침

일자리 창출 기업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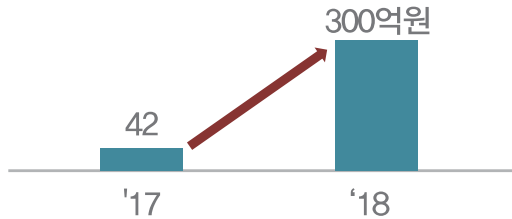
- 일자리 평가지표 도입

37개 사업(5.8조원)에 적용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 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펀드' 조성(1,000억원)
-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제도' 운영 (42억원→3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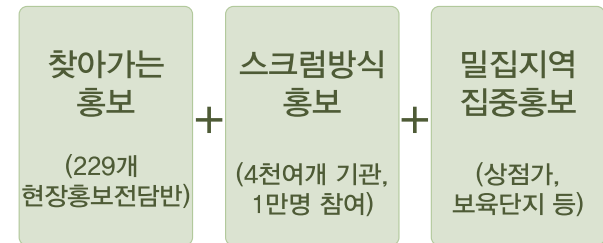


* 우대내용 : 전액보증(90%보증→100%), 0.5% 고정보증료 적용 등

일안자금 수혜기업 우대

정책자금, R&D, 마케팅 등 지원제도 우대
(가점 부여, 한도 확대 등)

- 일안자금 현장 홍보 추진



실천과제 2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창업 인프라 개선(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

- 다양성·자율성·개방성이 보장되는 지역별 혁신 창업 허브로 개편

다양성	센터별 특화, 투자기능 부여 등
개방성	대기업 중심 → 대학·벤처 등 참여주체 확대
자율성	프로그램 자율 운영 등

- 성과 우수 센터에 집중 지원

지역 혁신 창업클러스터 집중 지원

- 지역 혁신주체들의 자율적 협력체계 구성 추진
 - 대학(원)생, 연구원, 벤처기업 인재들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
 -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
- '18년 정부 출연연 등 기술·인력 기반이 우수한 지역에 시범 추진(1~2곳)

손쉬운 제작·창업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

- 국민 누구나 창작, 창업을 시도 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신설('18, 65개소)
- 전문인력 양성, 온라인 플랫폼 등 인프라 지원과 메이커 문화행사 등 운영

우수인력 창업 촉진

- 기업의 우수 기술인력 창업지원을 위한 사내 창업프로그램 신설

모기업 선투자

+

정부 매칭 지원

- 세제 감면 및 인센티브 강화 등 활성화 기반 구축

실천과제 3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로 자금 공급 확대

정부주도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 '민간(수요자) 제안 방식' 도입
 - * 민간이 투자분야 先제안 → 정책목적에 부합 시 모태펀드 매칭
- 콜옵션 확대 등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운영
 - ➔ 민간 자금 유입확대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공공부문(재정 · 정책금융 등) 3.7조원 출자 + 민간부문 6.3조원 출자

➔ '18년에 1차로 2.6조원 조성 추진

벤처투자촉진법(제정)에 규제 완화 등 반영

-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일원화 및 투자제도 체계화



- 민간자본 진입규제 및 투자규제 완화

진입규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창투자 전문인력 요건 현실화 등

투자규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 범위 · 방식에 대한 규제 최소화

실천과제 4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해 재도전 걸림돌 제거

연대보증 폐지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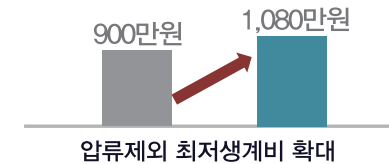
- 연대보증 대안시스템인 '책임경영심사' 도입 → 폐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병행

실패 채무 감면

-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중진공·기보·지역신보 등)



- 압류제외 최저생계비 확대(900→1,080만원),
세금 체납처분 유예대상 확대(3→5천만원, 성실경영평가통과자)



재도전 지원프로그램 강화

- 민간투자자와 연계한 재도전지원프로그램 신설



- 재기지원펀드 조성·투자(3,155억원) •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확대('17, 9개 → '18, 13개)



둘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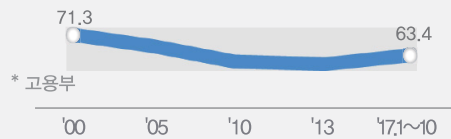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매출 · 소득 증대

양극화 심화 등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에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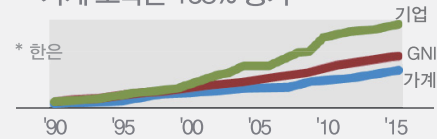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여전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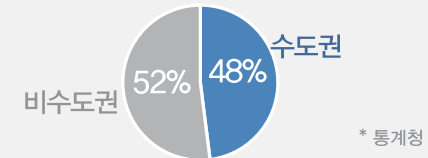
가계-기업 소득격차 확대

* '00~'16년간 기업소득은 255% 증가, 가계 소득은 138% 증가



수도권 집중 현상

* 기업 지역 분포 현황



→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실천과제

- ①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확산
- ② 기업-근로자간 근로보상 강화
- ③ 수도권-지역간 균형성장

실천과제 1 대-중소기업간 :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격차 축소

(대기업-1차 협력사) 협력이익배분제 도입('18.상)

이익공유 기준 제시

대기업이 목표한 매출 · 이익을 초과달성
⇒ 협력업체 기여 정도와 방식에 따라 현금 공유 기준 설정

인센티브 부여

도입한 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등

(1차-2·3차 협력사) 상생 확산

-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납품대금 만큼 2차 협력사에 결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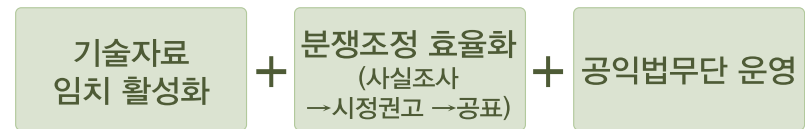


- 인센티브 등 부여, 확산 추진



성과 공유기반 강화

- 기술탈취 근절 3종 정책 도입



- 정부 매칭 통해 공동 연구개발 투자 확대(6,500억원, 누계)



- 상생 통한 스마트공장 확산(2천개) 및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22)

실천과제 2 기업-근로자간 : 근로보상 강화 통해 소득 증대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성과공유 기업 10만 확산' 추진



-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인센티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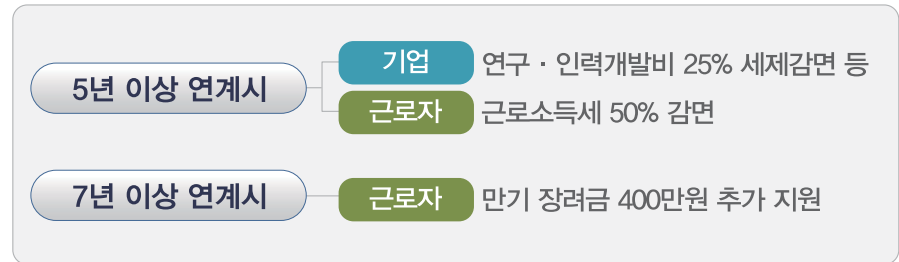


- 성과공유 모범사례를 선발하여,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포상·홍보·우대 지원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년)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3~5년) 강화



-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추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 연구 인력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R&D 내일채움공제' 신설

실천과제 3 수도권-지역간 : 특별지원 등을 통해 균형 성장 촉진

특별지원지역 지정제도 개편

- 산업 구조조정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해 집중 지원하여, 조기재해 극복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지정범위	산업단지	중소기업 밀집지역, 행정구역 등 추가
지정기준	낙후정도	재산손실, 매출축소 등 경제적 피해 추가
지원내용	세제·융자 등	소상공인 자금, 사업전환 등 추가 지원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 지역 중심으로 신산업의 규제없는 기업활동 유도

- 시·도 신청 ⇒ 지역혁신성장특구위원회(국무총리 위원장) 검토



지역 주력산업 재편 및 집중지원

- 융복합 산업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 재편

주력산업 63개
(융복합 비중 22%)

주력산업 48개
(융복합 비중 69%)

- R&D-시제품제작-기술지도 등 중점지원('18, 1,65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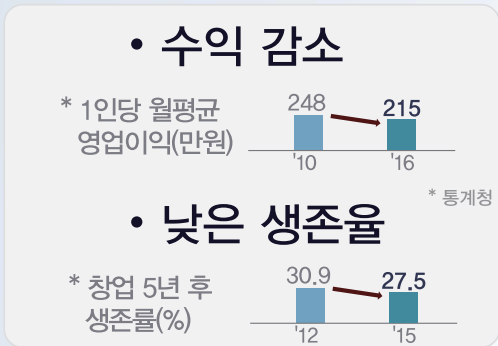


셋째

소상공인 · 전통시장

희망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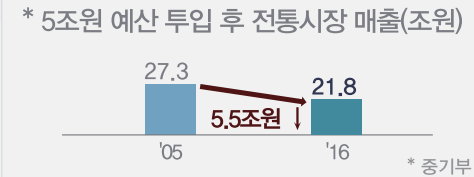
소상공인 · 자영업자 600만 시대, 그러나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상황



상권 내몰림, 임대료 부담

- (K 상권) 맛집, 카페 등 창업 확대로 상권이 활성화되었으나, 임대료가 70%이상 상승 → 기존 상인들 상권에서 내몰림

정부 지원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한계



→ 소상공인 혁신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 보호

실천과제

- ① 수익 올려주기
- ② 생업 터전 지켜주기
- ③ 상인 주도로 전통시장 혁신

실천과제 1 소상공인 수익 올려주기

소상공인 수익 · 성장 촉진

- 혁신형 소상공인 집중 육성('22, 1.5만개)

혁신형 소상공인

- R&D, 홍보 · 마케팅 지원
- 성공사례 공유 및 확산

백년가게

- 가업승계 조세지원
- 브랜드 · 디자인 지원

- 협동조합 협업촉진 및 규모화를 통한 성장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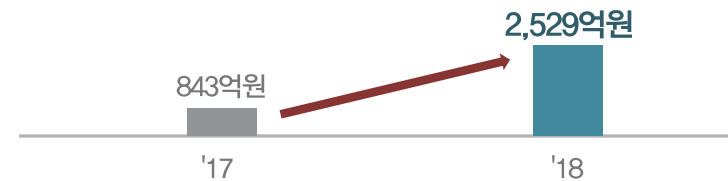
- 유형별(일반형, 선도형, 체인형) 차등화로 선도 · 체인형 조합 집중 육성
- 공동사업, 공동장비, 판로, 성장자금 등 패키지 지원

-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는 생활밀착형 규제발굴 · 개선('18.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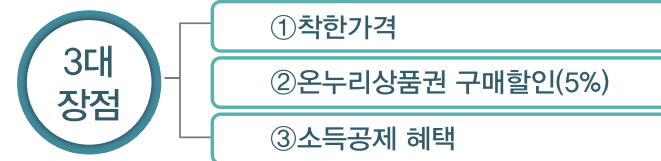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 공무원 복지포인트 연계 확대(10 → 30%)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규모



- 온누리상품권의 3대 장점을 집중 홍보하고, 기업의 구매 동참 유도



-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유도

실천과제 2 소상공인 생업 터전 지켜주기

복합쇼핑몰 · 전문점 등 규제 신설

-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 영업규제 신설



- 대규모 점포 출점시 상권영향평가 대상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환산보증금 상향
→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 내몰림 보호 목표
- 임대료 과다인상 등 방지장치 도입
 - 보증금 · 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 인하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 → 10년) 등
- 전통시장 지원 시 임대 · 임차인간 상생협약 의무화
(2년간 임대료 동결, 이후 3년간 2%내 인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보호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상)

* (법률안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대기업 진입 · 확장금지

- 업종 특성을 감안한 비생계형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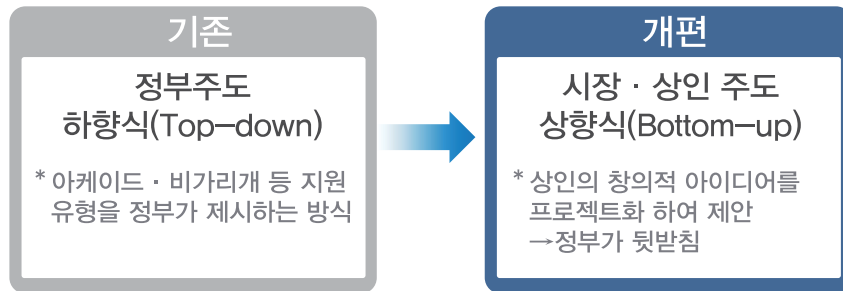
* 업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 공동·협동화 지원, 업종공통 R&D 등 지원방안 마련('18.상)

실천과제 3 상인 주도로 전통시장 혁신

상인주도형 활성화 프로젝트 신설

- 상인 주도로 변화, 혁신을 꾀하는 전통시장 우선 지원방식으로 전면 개편
 - 독창적인 아이디어, 고객 감동형 시설 등 상인 제안 프로젝트 집중 지원 (25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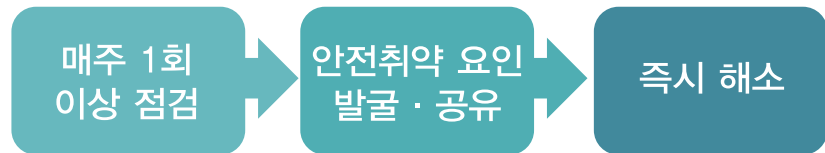
전통시장 지원방식



- 특성화 첫걸음시장 지원 사업 추진 (60곳)

화재걱정 없는 시장 만들기

- 화재안전 개선계획 없는 시장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배제 원칙 ('18, 788억원)
-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알림 및 속보장치 보급
- '20년까지 안전취약시장 300곳 노후전선을 일괄정비 ('18년 100곳 우선 정비)
- 전통시장 안전지킴이(83명) 임명 · 운영





넷째

정책 및 업무 혁신

실천과제 1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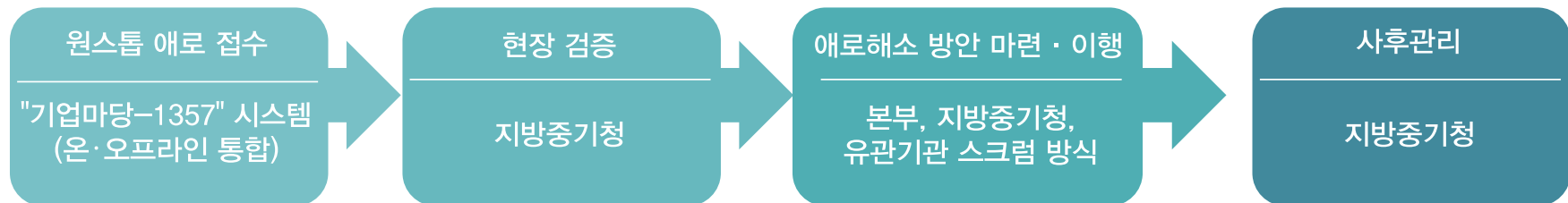
1 데이터에 기반 하여 R&D-자금-인력-마케팅-수출까지 일관지원체계를 통해 원스톱 지원

-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데이터 기반하여 일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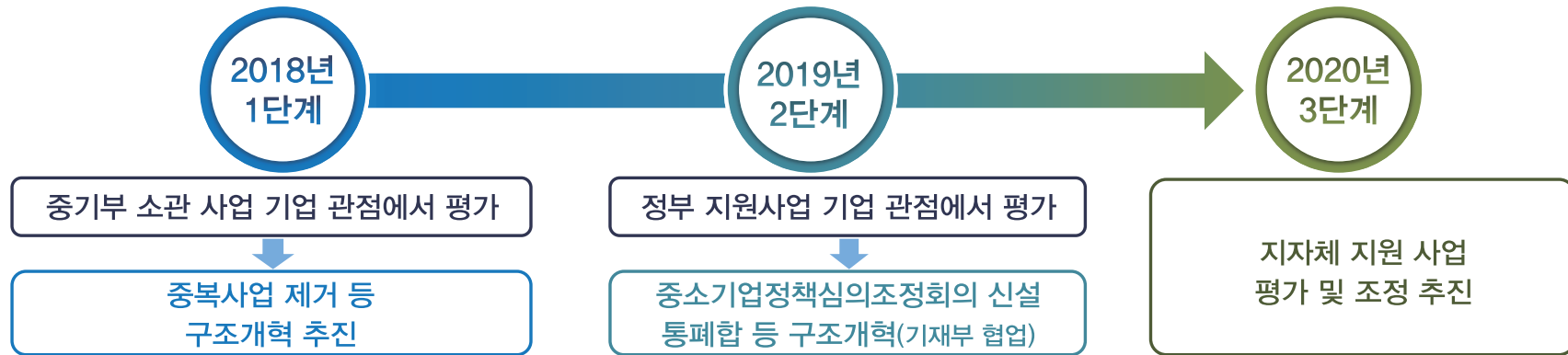
2 현장 중심의 행정구현

- 직접 업계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 집단이 아닌 개별고객을 관리



실천과제 2 정책 혁신을 통해 효율성 제고

1 복잡·다양·중복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폐합 등 구조개혁 추진('17년 1,347개 사업)



2 '민간 주도- 정부 후원' 으로 개편

투자

민간이 투자분야를 선 제안
→ 정책목적에 부합할 경우 모태펀드 매칭

전통시장

상인이 창의적 프로젝트 제안 → 정부 지원

R&D

벤처투자 받은 기업에 R&D 자금 연계 지원

3 정책 신규 진입 확대 및 부담 완화

첫걸음기업 지원

분야별 정책 처음 참여기업 전용 프로그램 신설

기업지율상환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정책자금 상환 허용
(청년전용창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시범적용)

조기상환 허용

정책자금의 조기상환 페널티 전면 폐지

실천과제 3 효율적·생산적 근무시스템 구축

혁신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아무말
대잔치

- 온라인 기반 익명 혁신 제안 시스템 운영

업무혁신
경진대회

- 직원 누구나 참여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개 경쟁 제도 운영 (우수 아이디어 포상)

집단 지성 활용

정책공유회 + 다면평가

주요직위 후보자와 업무토론,
후보자에 대한 다수의 평가

⇒ **최적직원 임명**

집단논의

중요 정책에 대해
스크럼 방식으로

간부들이 참여하여 결정

업무 부담 줄이고, 일과 가정 양립

원클릭
줄이기

- 보고서 간소화, 작성 시간 단축
⇒ **내용에 집중하는 문화 조성**

가정
친화제도

- 주말·공휴일 근무 제한, 연가 소진 의무화,
유연근무 활성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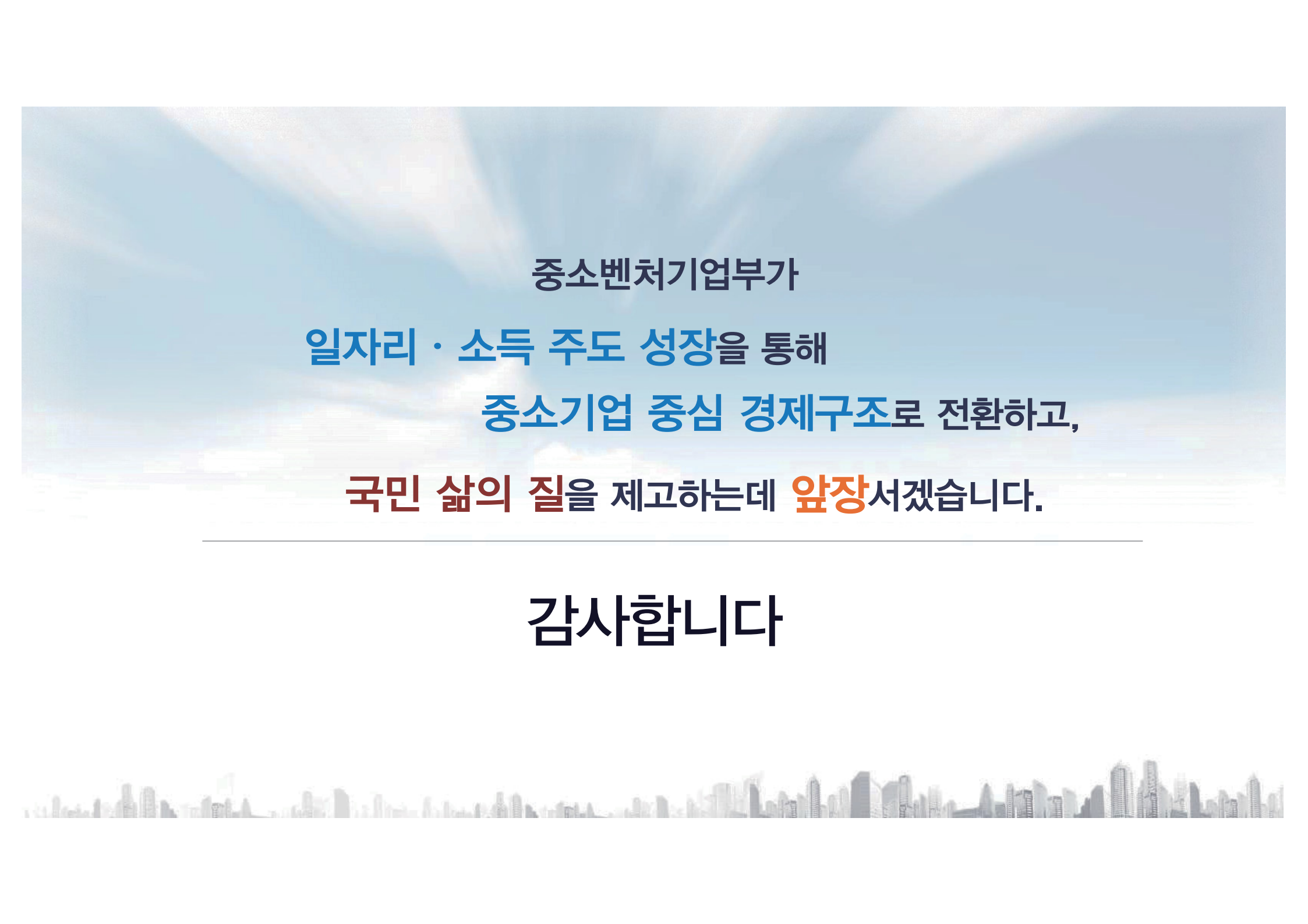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화재, 지진 등 실제 발생가능한 상황 상정



숙달될때까지 주기적 직접 훈련

* 911 테러시 모건스탠리 직원들은 평소 반복적인 재난 훈련으로 대다수(2,687명) 생존

The background of the slide features a bright, hazy sky with rays of sunlight streaming down from the top center. At the bottom of the slide, there is a silhouette of a city skyline with various skyscrapers of different heights and shapes.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018. 01. 18



목 차

- I. 추진 여건
- II.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 III.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 IV.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I. 추진 여건

I. 추진 여건

1. 보건복지 분야의 성과

현 정부 출범 100일 전후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
핵심 국정과제 집중 발표·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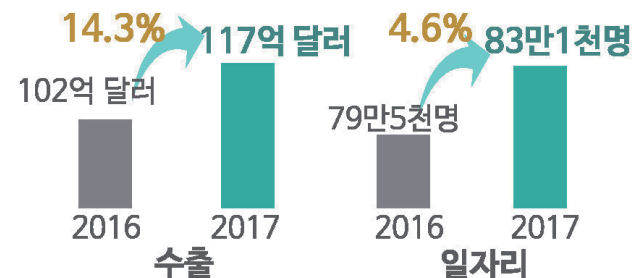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로드맵 ('17.10월)



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
('17.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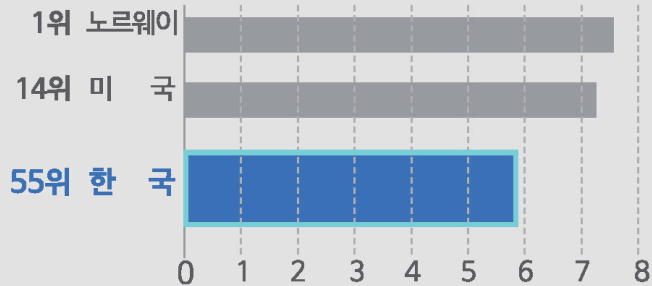


1. 추진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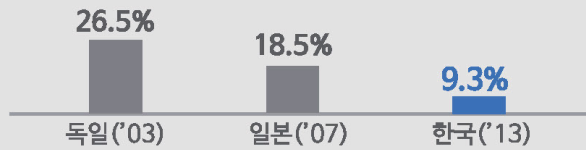
2. 아직 부족한 점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 필요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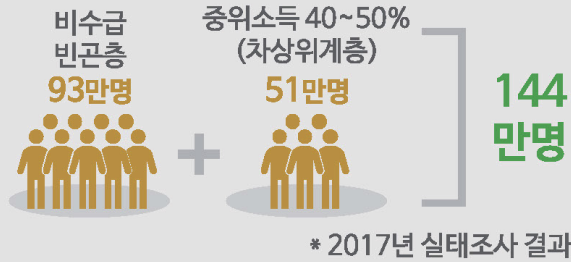


〈공공사회 지출 비교〉



※ 독일은 '03년에, 일본은 '07년에 국민소득 3만불 달성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빈곤층도 상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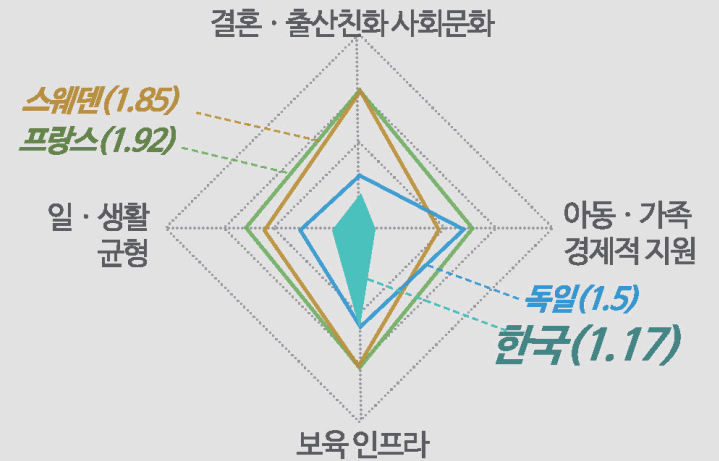
적정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한 공적연금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

일·생활 균형, 아동·가족에 대한 재정지출은 부족

보육지원 위주의 가족지출



※ 저출산 대책 예산 중 보육 비중: 한국 67%, 프랑스 40%, 스웨덴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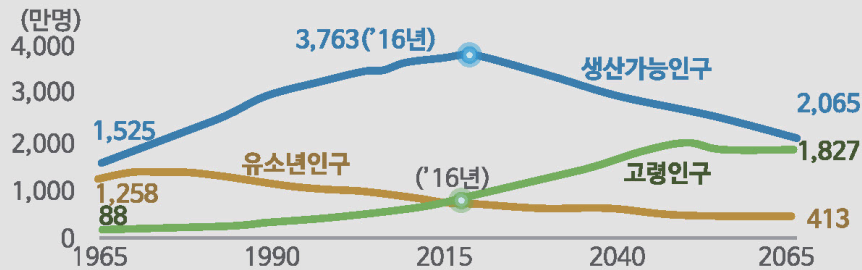
1. 추진 여건

3. 앞으로의 사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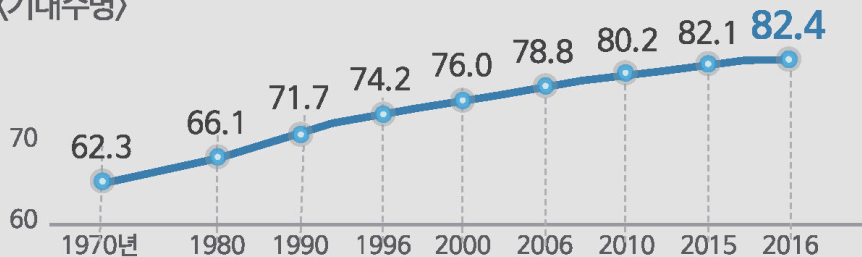
인구 변화

인구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적정한 수준 설정, 질적 변화 불가피

<인구변화>



<기대수명>



생애주기별 근로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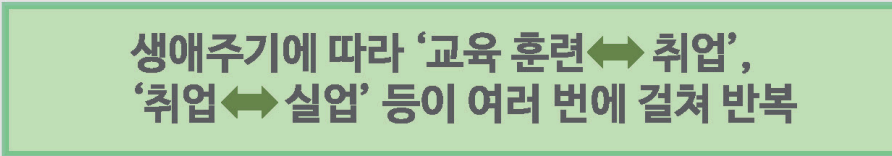
지금까지 ▶ 평생직장



- 건강한 고령인구 증가
- 빨라지는 기술변화
- 플랫폼 중심의 개인일자리



앞으로 ▶ 평생고용



1. 추진 여건

4. 3만불 시대, 사회안전망 혁신 필요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연령

건강이 좋지 않아서

19.2% 50.2세

가족을 돌보기 위해

15.5% 39.6세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31.0% 50.7세

정년퇴직

8.0% 58.1세

*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고령층 부가조사

경력단절
전·후 임금

月173.1만원



경력단절 前

月146.3만원



재취업

경력단절
여부에 따른
임금

月241.8만원



경력단절 경험 없음

月166.6만원



있음

*2016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변화가 필수적

1. 추진 여건

5. 포용적 복지국가의 모습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지금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경제보다 후순위로서 복지)

앞으로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사람 중심의 사회안전망 (경제=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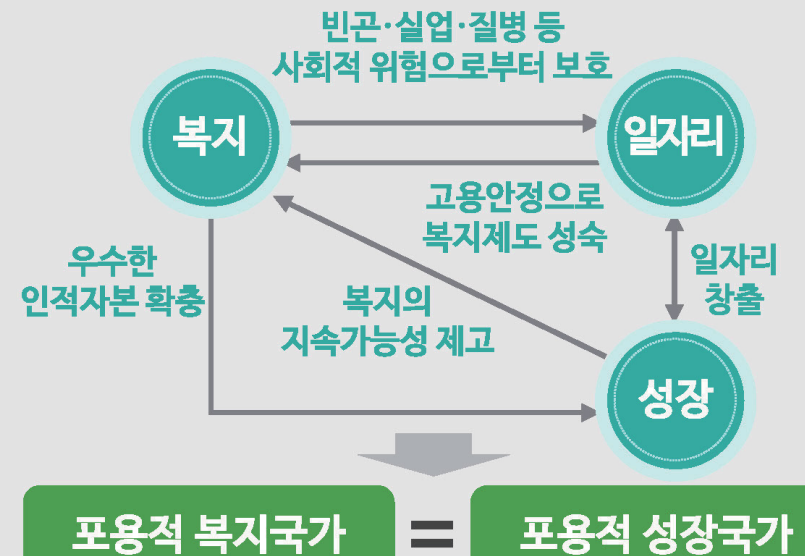
포용적 복지국가의 모습

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누리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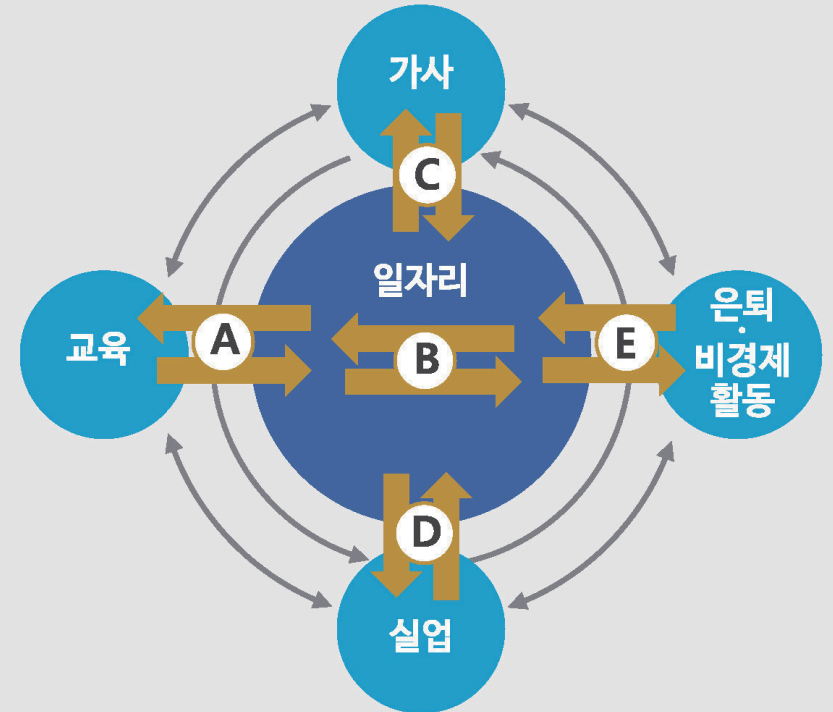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



I. 추진 여건

6.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 A**
 - 교육 → 취업 : 보육, 아동건강투자, 아동수당, 초·중등 교육, 교육-고용연계
 - 고용 → 교육 : 직업훈련
- B**
 - 이직, 창업 등 : 직업훈련,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창업지원, 고령자창업지원, 의료보장
- C**
 - 고용 → 가사 :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육아휴직, 양육 지원
 - 가사 → 취업 : 보육, 장기요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경력단절 여성지원
- D**
 - 고용 → 실업 : 실업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 실업 → 취업 : 직업훈련 교육, 중고령자 취업지원, 자활지원, 의료보장
- E**
 - 고용 → 은퇴, 비경제활동 :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장기요양서비스, 여가·문화, 평생교육
 - 은퇴, 비경제활동 → 취업 : 고령자 고용, 노인·장애인일자리, 의료보장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마련 필요

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II.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1.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국정과제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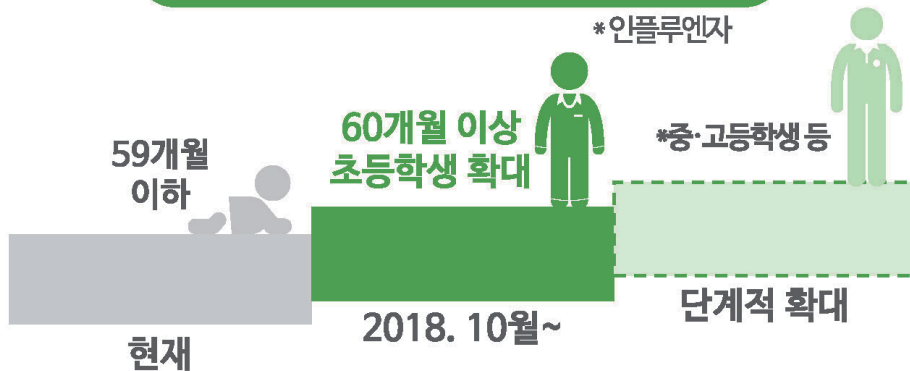
아동수당 신규 도입

▶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소득하위 90% 이하 약 238만명, 9월)

- 대상자 수, 소득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6월부터 신청 준비

국정과제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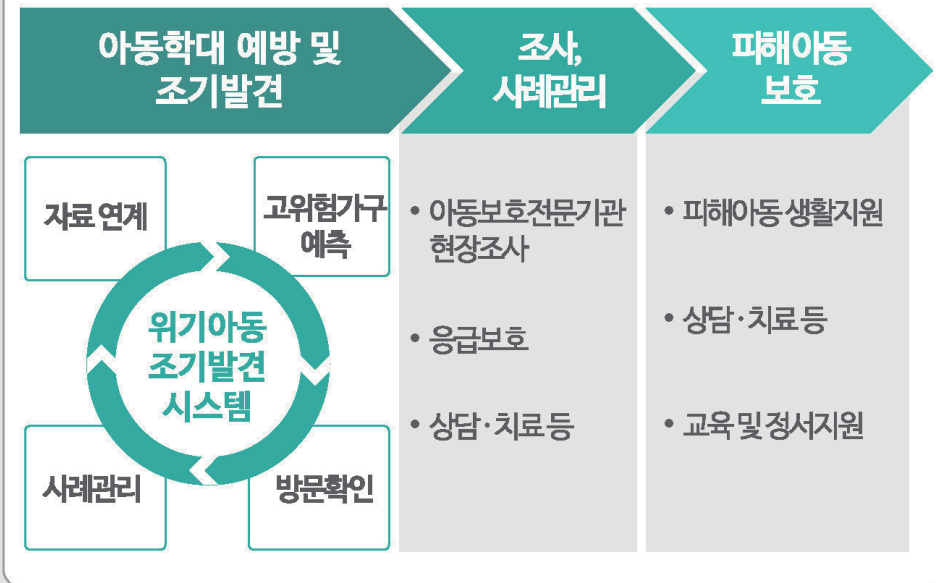
국가예방접종 강화



국정과제 48

아동학대 예방 강화

▶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전국 확대(3월)



II.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2.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사전예방



국정과제 42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0월)
- ▶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추가 보호 (연간 10만명)
 -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화
- ▶ **생계·의료급여를 못 받은 빈곤층 93만명('15) ➡ 47만명 이하('22)**
- ▶ 걱정 보장을 위해 **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등 개선**
 - *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가구는 94만명 추정

국정과제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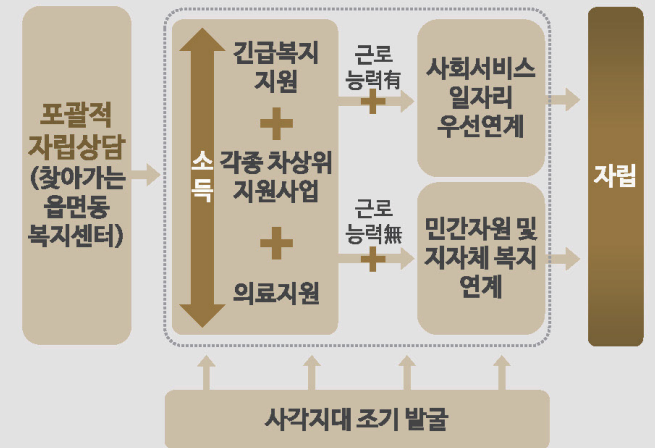
자립지원 강화

- ▶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생계급여 수급 청년 (15~34세)
월 40만원 지원 3년 후 1천5백만원
- ▶ **자활급여 인상(8.2%), 자활일자리 1,500개 추가** ('17년 45천 ➡ '18년 46.5천개)
- ▶ **기초수급자의 사회보험료 공제 확대** (보험료의 50% ➡ 75%, 1월)
- ▶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 도시재생, 사회적 농업 육성 등과 연계**

국정과제 42

빈곤 사전예방체계 구축

-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체계화를 위한 통합지원업무 지침 마련** (17개 부처의 87개 사업, 하반기)



II.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3. 편안한 노후를 지원

일자리 E 은퇴비경제활동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정과제 43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9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10월)**

- ▶ 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 → 75만명가입

노인 일자리

국정과제 43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역량제고 프로그램 강화**

- ▶ 노인일자리 확대('17년 46.7만명 → '18년 51.0만명)
- ▶ 우수 노인고용기업 인증 등 민간시장 고령자 고용촉진
- ▶ 베이비부머,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유형 도입

노인돌봄

국정과제 43

치매국가 책임제, 장기요양 서비스

- ▶ 치매진단 MRI 건강보험 적용(1월)
- ▶ 경증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1월)
- ▶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사례관리 체계화



존엄한 죽음

국정과제 45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 연명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행(2월)에 만전
- ▶ 호스피스 시범사업(가정형 등)을 확대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18.3개소) 등 추진기반 강화

II.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4.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혁신 '22년까지 34만개 창출

국정과제 17

- ▶ 국민체감,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예시 : 중독통합관리사)
- ▶ 복지시설 종사자 연가 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근무여건 개선(예: 2교대 → 3교대)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

스마트 헬스케어 '22년까지 10만개 창출

국정과제 34

- | | |
|--|---|
| ▶ 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8~'20) | ▶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체계 구축방안 마련(6월) |
| ▶ 연구중심병원 R&D ('18년 300억원)
보건산업 혁신창업 지원센터 운영(2월)· 펀드(6월) 신설
→ 5년 간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1천개 | ▶ 로봇,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시범사업(하반기) |
| | ▶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신설(7월, 중국)
→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 지원 |

Ⅲ.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Ⅲ.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1.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

가사

C

일자리

국정과제 48

보육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연간 450개소) ➡ '22년 공공보육이 40%를 차지

-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 매입 활성화 등 확충방식 다양화
- 신축 지원단가를 인상(4.2억 ➡ 7.84억원), 지자체 보조율 차등화 등 균형 배치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를 9.6% 인상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1월)

- 합리적인 보육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반기)



아동
돌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10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실시(3월)
- 지자체 중심의 지역돌봄협의체 구축방안 마련(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협업)

국정과제 48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

기존 인프라 구축 등 보육지원 중심

패러다임
전환

일·생활 균형,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



2. 장애인 권익 신장



국정과제 42

장애 등급제 폐지('19.7월)

맞춤형서비스제공

- ▶ 일상생활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 고려한 **종합판정도구 개발**(6월)
- ▶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 정비(12월)
-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실행 방안 마련(6월)
47개 관계법령 정비(12월)



국정과제 42

장애인 건강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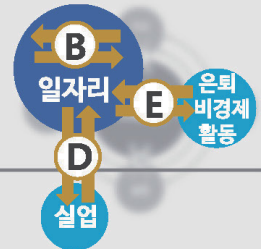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 구축

- ▶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
→ **합병증, 만성질환 관리**
- ▶ 건강검진기관(10개소) 지정
→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22년 60%)
-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건강관리, 진료, 재활, 임신·출산 지원**('21년까지 시·도 별로 확충)
- ▶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건강관리 의사 도입, 재활 수가 개선 등
* (건립 착수) '18년 1개소, '19년 4개소, '20년 4개소

III.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44



▶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 해소, 환자 본인부담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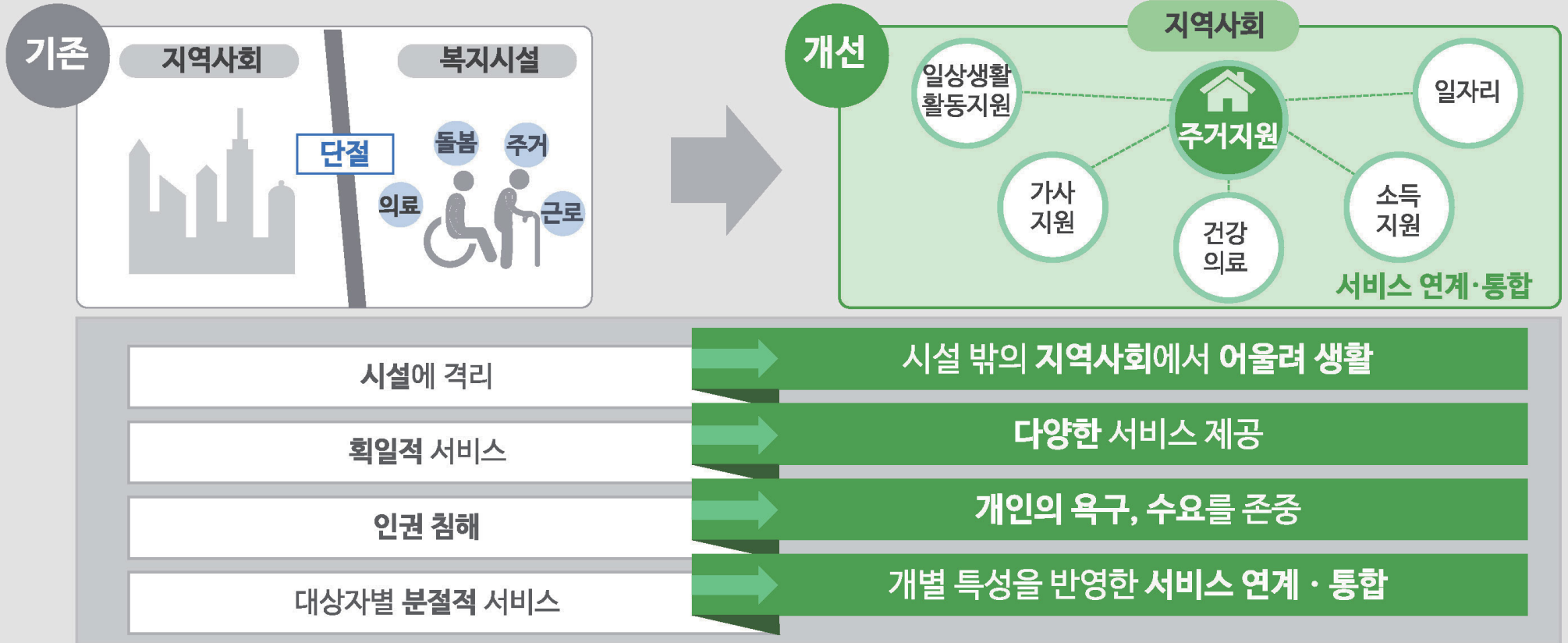
1~2분기	3분기	4분기	'1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진료 폐지 ▶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노인외래정액제 정률 구간 개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수급대책 발표 ▶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인실 상급병실 보험 적용 ▶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50%→3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본사업 시행 ▶ 뇌, 혈관 MRI 보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 충치치료 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 보험료 인하 유도 등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I·초음파 등 급여화 지속 추진 ▶ 1인실 상급병실 일부 보험 적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지속 확대('22년 10만 병상)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9월), 시행('19~'23)

IV.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IV.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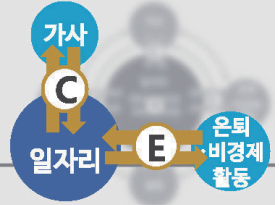
1. 사람 중심 보건복지정책



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정책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지원

IV.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커뮤니티 케어)



장애인 탈시설화

-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 마련(11월)
- ▶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19~)
- ▶ 자립정착금 지원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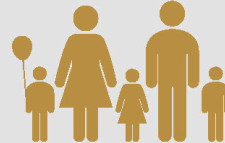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 ▶ 중간집 (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모형 개발
→ 사회복귀 지원
-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 강화
- ▶ 절차보조인·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의사결정 지원으로 자립 강화



아동 지원 확대

- ▶ 시설보호 위주에서 지역사회·가정보호 중심으로 개편방안 마련('18)
*아동복지시설 기능 개편, 입양체계 개편
- ▶ 심야 등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18)
- ▶ 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사례관리, 주거, 일자리 지원 등)



노인 의료·요양·치매

- ▶ 욕구, 신체상태, 돌봄 여건 등 고려
- 의료

시설
돌봄

단기
돌봄

재가(在家)
서비스
- ▶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 가족지원, 서비스 연계 등 지원
 - ▶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로드맵 마련(상반기)

IV.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3.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건강 관리

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18년)

현행	개선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 등 건강증진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 모자보건사업 • 의료비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모형 개발 • 맞춤형 건강상담·지원 및 방문서비스 제공·연계·협력

▶ 보건소를 통한 통합적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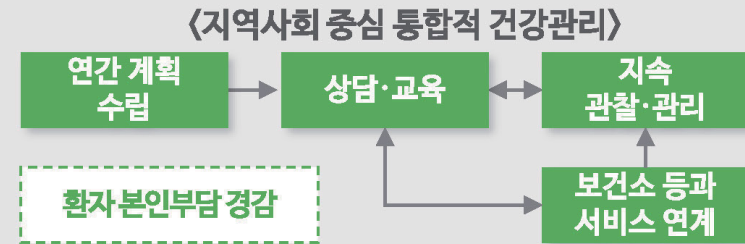


- 제공 : 신청사업 중심 → 맞춤형 플랜
- 대상 : 보건소 방문자 중심 → 찾아가는 서비스
- 연계 : 분절적 서비스 → 복지연계서비스

만성 질환

동네의원 중심 관리체계 구축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상반기)· 확산

-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6~)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14~)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
-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07~)



단계적
통합

IV.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4.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기반 조성



국민 체감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전담인력 확충

통합 사례관리·방문건강관리 강화

전담 공무원 확충

- 사회복지: 1.2만명 (~'22년)
- 방문간호: 3.5천명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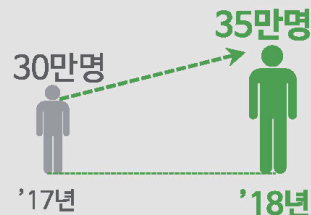
* 아동복지 200여명, 치매전담 500여명

정신건강복지센터(1.5천명) 등 서비스지원 인력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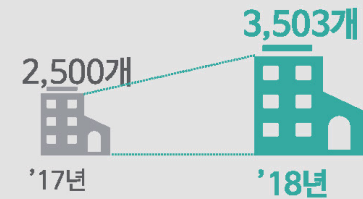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보를 적극 활용

실직, 질병, 빈곤 등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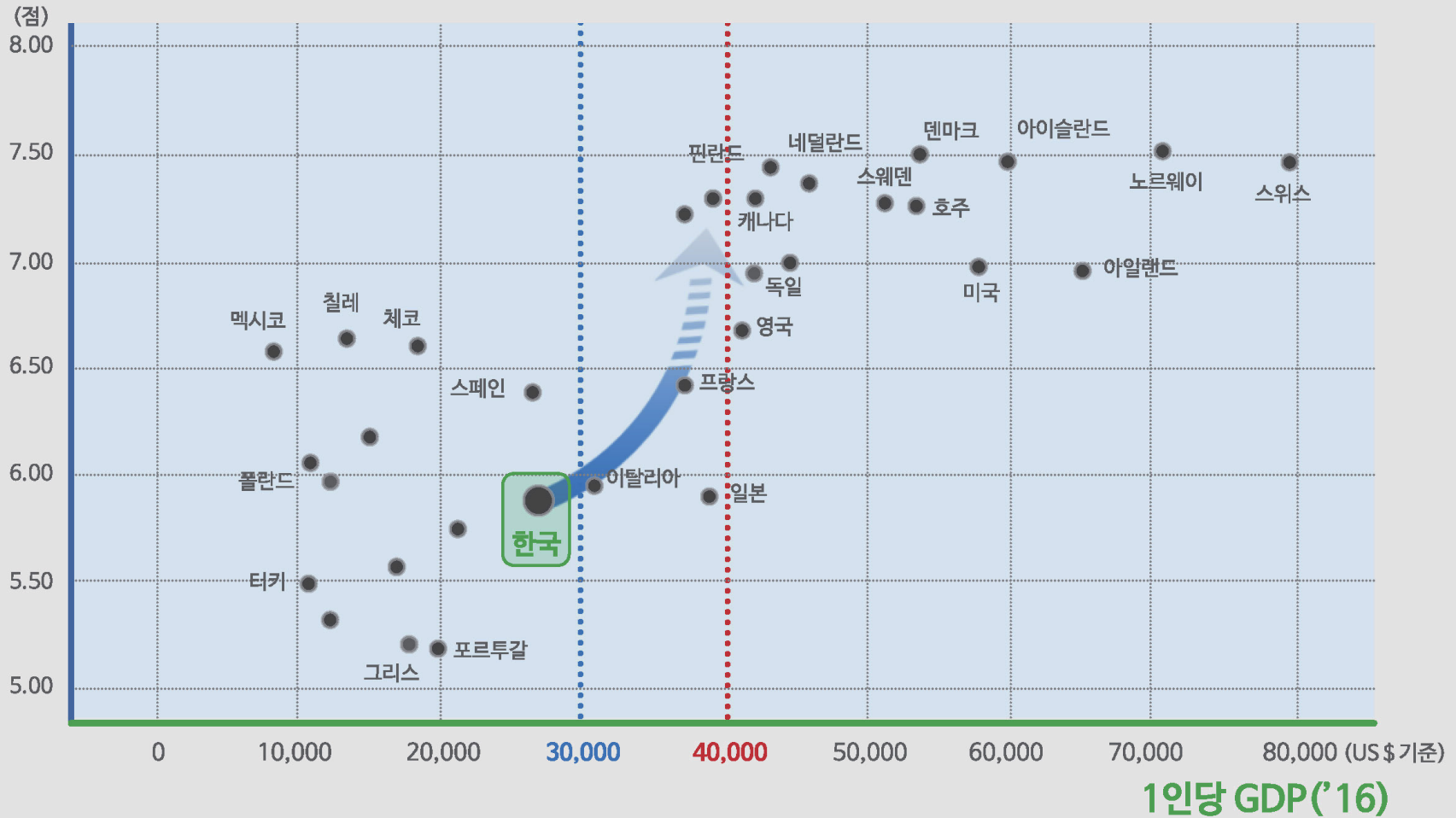
전국 읍면동 확대



주민센터·보건소·사회복지관 등 공공·민간복지자원 연계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4만불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행복지수 ('14~'1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대변화 원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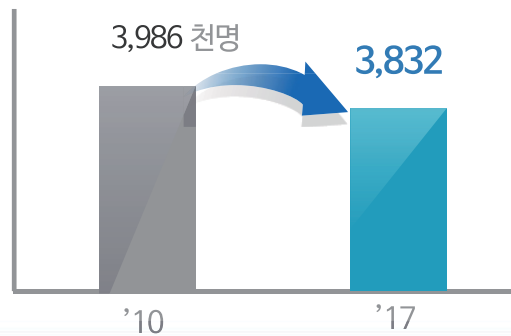
2018.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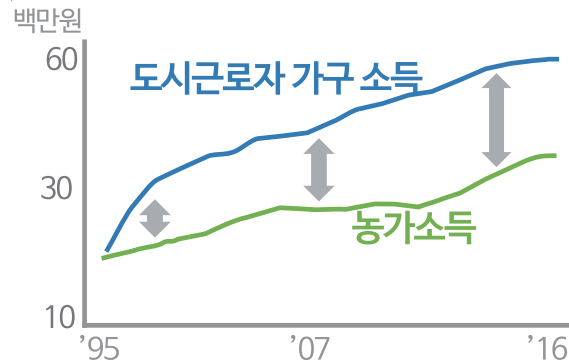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부문 일자리와 농가소득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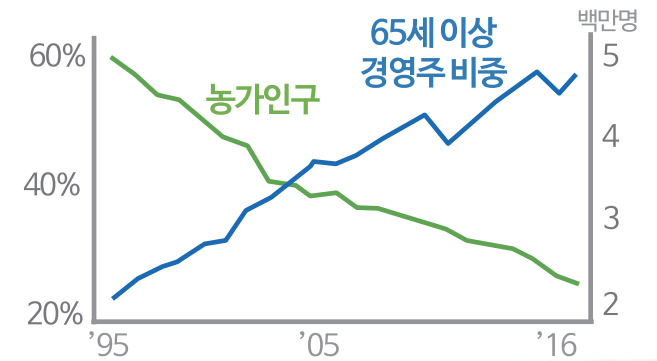
농식품 취업자수 정체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그러나 희망과 기회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 농지규모 보다
과학·영농기술이 경쟁력 좌우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 '16년 11만명 농촌 순유입
- 청년 귀농 1,340가구

3만불 시대 국민 삶의 변화

- 농촌 관광 11백만명 시대
- 반려동물 6조원 전망
- 말산업 4.2조원 전망

농식품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소득주도 성장 견인
농업혁신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 → 농가소득 안정
3만불 시대에 걸맞은 농촌 구현 → 국민 삶의 질 향상

1. 농식품산업과 농산촌에서 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올해 일자리 3만 3천개, 22년까지 17만개 창출 ”

청년 창업

청년창업농	1,800
스마트팜	860
외식창업인큐베이팅	200



신수요 일자리

반려동물	1,120
말산업	1,000
농촌융복합산업	730



고부가 미래산업

종자·농생명소재	140
곤충	280
가정간편식 등	3,800
첨단기자재	76



산림 및 기타

공공일자리	15,000
산림복지전문업 등	3,000
사회적경제 등	1,000



R&D 바우처, 농식품 벤처 펀드, 농신보 보증, 정책자금 우대 금리 등 적극 지원

청년 창업붐을 일으키겠습니다.

① 청년농업인 정착부터 성장까지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 일자리 목표 | '18) 1,800명 → '22) 10,000명

역량있는 청년농업인 1,200명 선발(월 최대 100만원 지원)

자금

농신보 우대 보증
보증한도 (2억원 → 3)
보증비율 (90% → 95)



농지

농지은행 비축농지
최우선 임대 지원
(임대료 최대 80% 감면)



교육

경영실습농장(30개소)
농장당 3~5명이
최대 2년 이용



'22년까지 청년 경영주 비율 1.4% 이상으로 확대 (현 추세 시 0.5%)

②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일자리 목표 | '18) 860명 → '22) 4,820명

 스마트 온실(누적) ('17) 4,000ha >> ('18) 4,510 >> ('22) 7,000

 스마트 축사(누적) ('17) 750호 >> ('18) 1,350 >> ('22) 5,750

창업

'스마트팜 창업보육 센터'를 통해 창업농 양성

* 팀단위 공동교육·실습·창업, 재배 기술, 경영까지 단계적 교육·실습

성장

R&D 바우처 및 종합자금, 벤처펀드,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재도전

경영회생자금 지원, 농지매입 후 재임대

창업보육·생산기반 통합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22년까지 4개소)

➔ 빅데이터 분석, S/W, 기자재 등 연관산업까지 효과 파급



③ 다양한 식품·외식의 창업과 취업을 돕겠습니다.

일자리목표 | '18) 1,638명 → '22) 17,340명

식품·외식창업 공간 제공

- 조리시설이 갖춰진 매장 무료임대
→ 메뉴개발부터 매장운영까지 실전경험(5개소)
- '창업지원 Lab' 확대 운영(16개팀)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기회 제공



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 정육점에서 햄, 소시지 등을 가공·판매
- 창업·업종 전환을 위한 경영컨설팅(50개소), 소비자단체 인증(10개소)
- 시설·운영자금 지원(개소당 5억원)

〈쌀가공 산업〉

- 고품질 쌀 가루 생산 및 식품업체와 연계한 제품 개발
- * 시장규모: ('16) 4.4조원 → ('22) 6.2



해외 인턴 파견

- 해외 진출 한식당·외식기업에 청년 취업 지원
-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 운영
-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 청년 인턴 파견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①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일자리목표 | '18) 1,120명 → '22) 18,050명

자격증 신설 · 공인

- 행동교정 분야 자격, 동물간호 복지사 신설
- 애견 미용 분야 민간 자격 국가 공인

서비스업 체계화

- 소규모 애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생산자 허가
- 공공장묘 시설 설치(2개소)

펫사료 산업 육성

-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 추진
- 고부가가치성 사료 개발 R&D
-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 제정 추진

- 동물 서비스업 육성
- 교육·훈련 등 전문인력 양성
- 창업 및 우수업체 지원근거 마련

반려동물 시장규모 ('17) 2.1조원 → ('22) 6조원

② 생활 속 승마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일자리목표 | '18) 1,000명 → '22) 6,500명

기반조성

- 승마시설 개선(15개소)
- 농어촌형 승마길 확대 ('17:57km → '21:500)
- 말산업 특구 신규 지정(2개소)



저변확대

- 학생승마 체험 확대(7만명)
- 유소년 승마단 확대(24개소)
- 자유학년제를 활용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인력양성

- 승마지도사 국가 자격화
-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말산업 인턴십 지원
- 말산업 종사자 보수 교육



말 산업 시장규모 ('16) 3.4조원 → ('22) 4.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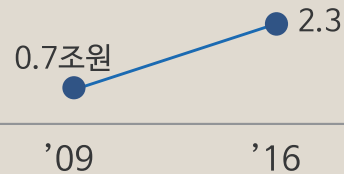
③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에 맞는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목표 | '18) 3,800명 → '22) 24,130명

가정간편식(HMR)

-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및 고급화 R&D 강화
- 식재료 사용과 연계한 원료구매 및 마케팅자금 지원
- 혼밥·급식시장 성장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



바이오·고령친화식품

- 과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된 식품에 대한 신고·표시제 도입 추진
- 식품첨가물·식품용 효소 등 바이오식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발효식품 우량 종균 개발·보급
- 고령자 맞춤형 식품기술 개발 (경도, 영양 성분 등 표시)



푸드테크·포장재산업

- 식품산업과 ICT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마케팅 등 지원
- 기존 식품소재를 대체하는 식품(식물성 고기 등) 및 스마트 포장기술 연구·개발



* (스마트포장 사례) 김치 발효과정에서 가스만 배출되고 액체투과는 방지하여 신선도 유지

4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일자리 목표 | '18) 815명 → '22) 7,384명

농촌관광 전문화 · 다양화

- 농촌관광 해설사 도입
- 청년층을 관광 전문인력으로 육성
- 중학교 자유학년제 및 초등학교 체험학습 연계 강화(55천명)
- 동식물 · 곤충 활용 치유 프로그램 개발(10개소)



융복합산업 육성

-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확대
* ('17) 1,397개소 → ('18) 1,500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
('17: 69개소 → '18: 74) 등
창업 보육 지원 강화
- 농촌융복합 산업지구를
지역 특화산업 거점으로 육성



지역 푸드플랜 확산

- 지역단위 농업생산-소비의
순환 체계 구축
- 선도 지자체 선정 지원(8개소)
-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 조직 육성

완주사례

지역내 1,500 중소농 참여, 12개 로컬푸드
매장에 신선한 농산물 공급, 지역일자리 창출



5 산림을 활용한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인력 | 일자리 목표 | '18) 18,899명 → '22) 60,178명

산림 특화 전문가 양성

- 산림치유, 유아 숲교육 등 산림복지 전문업 육성(350개)
-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6월)



산림자원 산업화

- 지역의 목재 · 임산물 활용 클러스터 육성(12개소)
- 산림일자리 발전소 신설
- 사회적 경제 방식 일자리 창출
 중간 지원 조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산불 · 산사태 등 재해 분야 인력 확충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공공산림가꾸기, 도시숲 관리 등)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업을 준비하겠습니다.

1 종자·농생명 소재 등 생명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일자리목표 | '18) 140명 ➔ '22) 994명

종자산업기반강화

- 2단계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국산우수품종 수출 확대(6천만불)
- 해외 전시포 운영(5개국), 국제 종자 박람회 개최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설립(~'19)



기능성 소재 개발

- 7대 중점분야 중심의 대규모 R&D 추진
 - * 천연 고분자, 항균, 건강증진, 사료첨가제, 동물백신, 생물농약, 친환경비료
- 〈누에 실크 인공고막〉
기술개발 및 실용화('10~'17)를 거쳐 30억 규모의 시장창출 기대



미생물 산업화

- 농식품 미생물 산업화 지원 확대
 - *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 천연살충제, 면역강화제, 축산악취 저감제
-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운영
 - * 관련기업에 연구장비대여, 시제품제작, 인력양성 지원



②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일자리목표 | '18) 280명 → '22) 1,400명

생산·보급 기반 구축

- 무병·우량 곤충 보급을 위한 곤충종자 보급센터 구축(~'19)
- 곤충 전문인력 양성 기관 확대('17: 15개 → '18: 20)
- 광역단위 곤충자원센터를 통해 농가 종합지원(4개소)
- 곤충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18)
* 곤충 대량 사육·가공·제품 개발

신규 수요 창출

-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 사료 개발
-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 확대(7종 → 10)
- 곤충요리 경연대회 등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



③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과학영농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인력 | 일자리 목표 | '18) 95명 → '22) 1,920명

빅데이터 기술 활용

- 영상정보 등 활용, 농가생육·환경 데이터 수집 확대
* '17: 200호 → '22: 800
- 정밀 의사결정이 가능한 생육환경 관리 프로그램 개발
- 농식품 데이터를 민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첨단 농기자재 보급 확대

- 자율주행트랙터, 정밀파종기 등 R&D투자 확대('19년 상용화 목표)
- 드론·인공위성 영상정보를 활용한 수급 분석기술 개발
- 주산지 중심 발작물 파종·수확기 집중 보급
* '18: 65개소 → '22: 240
- 전문방제업종 신설 등 방제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유통시스템 도입

- 축산물등급 영상판정 기능을 갖춘 스마트 축산물종합처리장 확산
* '17: 1개소 → '18: 3
- 과일 비파괴 당도 측정기 정확도 제고 추진
- 원산지 단속·이력추적 등에 블록 체인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신보·자금

- 동일인 보증한도(개인 10억원)와 전액보증 한도(2천만원) 상향 추진
-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30억원) 등 신규 지원



R & D

- R&D 추진체계 전반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
- 수요자가 직접 연구기관을 선택하는 R&D 바우처 확대
- 정부·농협 공동 R&D 매칭펀드 조성(47억원)



벤처 창업 지원

- 벤처창업인턴제, 찾아가는 창업보육(100개소)
- 벤처 등 농식품 펀드 조성(연 500억원 이상)
- 벤처창업 특화센터(5개소)를 통해 자금·기술·마케팅 밀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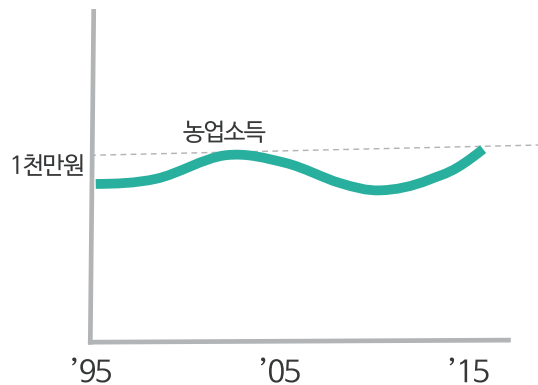
수출

-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맞춤형 상품개발 등 가공 식품과 농자재 수출지원 확대
- '신남방 정책'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청년인턴, 시장개척단 파견 시장조사



2.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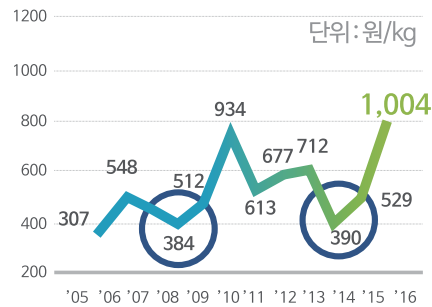
소득 정체



• 농업 소득 1천만원 수준 정체

가격 위험

배추가격변동



•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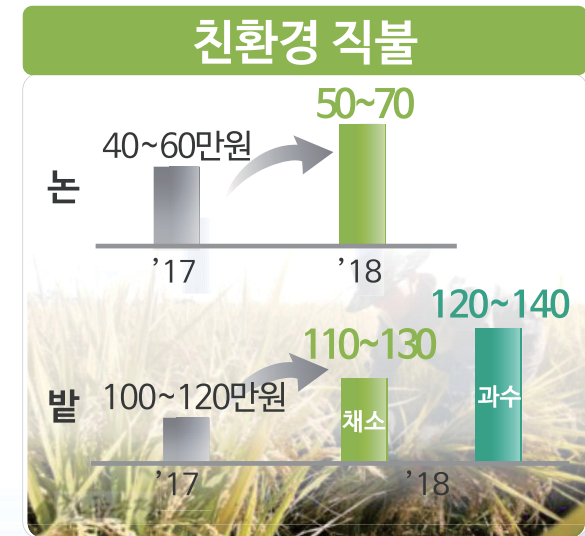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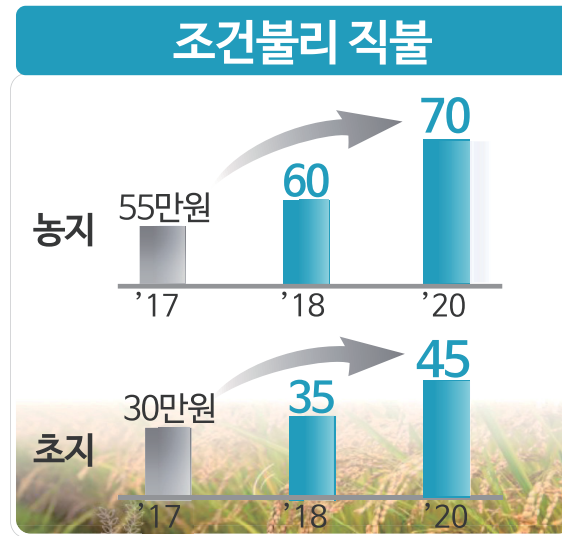
재해, 사고 위험



• 우박·가뭄 등 피해 29,971ha('17)

직불금을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을 높ی겠습니다.

직불금 단가 인상(ha당)



* 밭고정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속 인상 (ha당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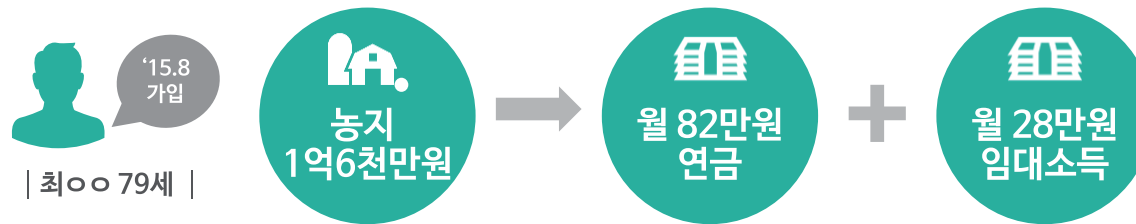
기존 직불을 공익형 직불로 확대·개편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등 상호준수의무 강화



월 100만원 농지연금으로 고령농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 (사례) 1억6천만원 상당 농지 가입 → 월 82만원 연금 수령, 월 28만원 임대소득 창출



● 제도개선, 맞춤형 홍보로 가입 확대('17: 8,631명 → '18: 12,000)

- 농지 감정평가액 상향조정 추진(80% → 90), 월 지급금 12.5% 증가 효과
- 도시 자녀의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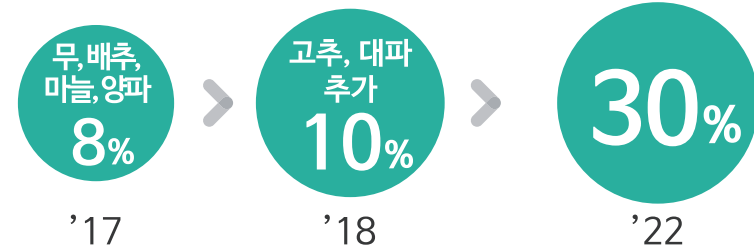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 주요 채소 품목에 대해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되, 평년가격의 80%를 보장

〈대상품목과 물량확대〉



생산자단체 조직화

- 주산지 협의회와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전국단위 품목별 조직화
- 재배면적·출하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체계화

* 생산자 조직 확대(주산지협의회: 4개 품목 → 11, 의무자조금 단체: 8개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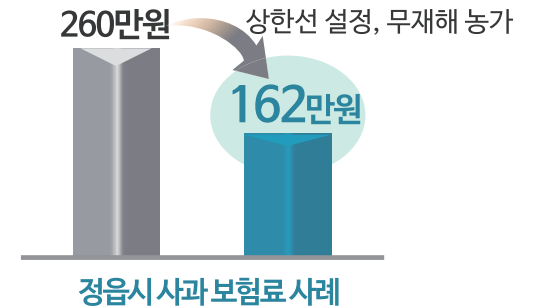
- 빅데이터·드론 등 첨단기기 활용, 농업관측 고도화
- 파종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농업인의 자연재해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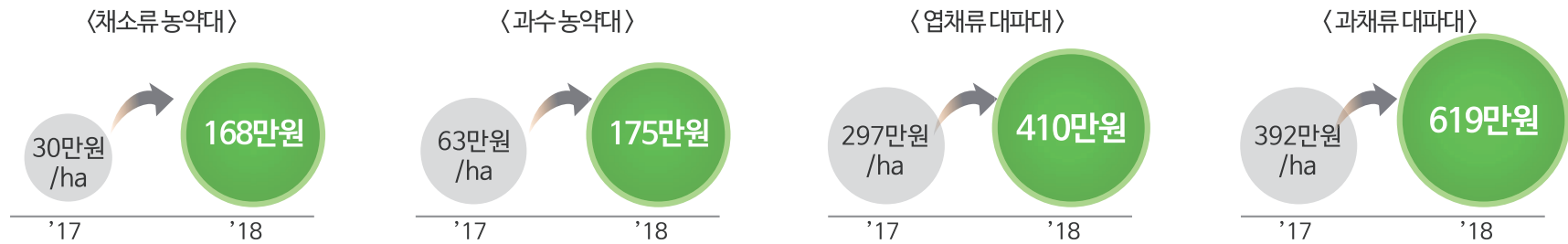
농업재해보험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품목(사과·배·벼)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 무재해 농가 보험료 할인(5%)



재해복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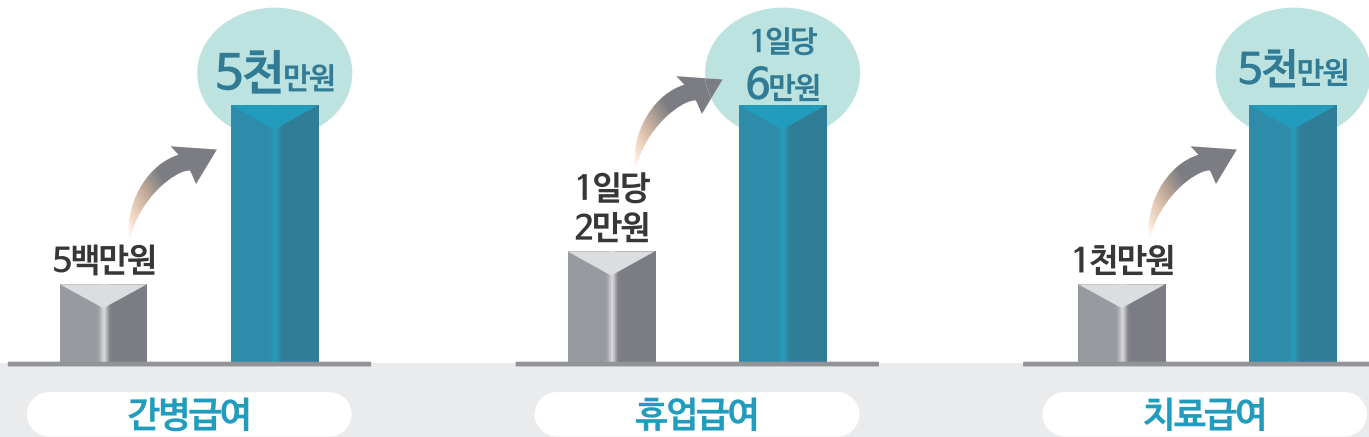
- 농약대·대파대 지원단가 대폭 인상(평균3배)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액 포함 방안 관계부처 협의('18하반기)

농업인 안전보험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업인은 대부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농업분야 재해율은 산업분야의 2배 수준
- 보험료율 산출방식 개선 ➡ 보험료 '17년 대비 10% 인하
-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강화한 신상품 개발 · 보급



- 안전보험 영업이익 일부를 적립하여 보험료 인상요인 최소화



농촌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서비스 접근성 제고

-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전체 군 지역 (82개)으로 확산
- 소규모 어린이집 확대(52개소)
- 농촌지역 분만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

- 영농도우미 (15천가구), 행복나눔이 (14천가구) 지원
-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5천명)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 도입(1천명)
-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 확산 유도
-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 배우자 동의없이 등록 가능
- 농협 조합원 및 임원에 여성 농업인 참여 비율 제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9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5억원)

- 농촌지역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재활, 교육서비스 제공

☉ 한농대에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설, 인력양성

☉ 로컬푸드직매장 등 판로 확보 및 크라라우드 펀딩 등 자금지원 방안 마련

☉ '사회적 농업법' 제정 추진



흥성행복농장

의사·농업인·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업을 활용한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수료한 장애인 중 일부를 농장에서 고용



영광여민동락 공동체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 생산·가공과 관련된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2018년 농림축산식품 모든 공직자는

농업의 **대변화**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2018. 1. 18.



목 차

I 해양수산업 현황

II 정책 추진방향

III 추진과제



I | 해양수산업 현황

1 특성과 잠재력

해양수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필수 기반 산업

- ▣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운이 담당
- ▣ 1인당 수산물 소비량(60kg) 세계 1위

연안지역의 핵심 산업이자 일자리 기반

- ▣ 연안지역 총생산 483조원(전국의 34%)
- ▣ 지자체별 중장기 해양수산업발전계획 수립 (부산, 충남, 경북, 전남, 제주 등)



세계 해양수산업 지속 성장 전망(OECD, '16)

- ▣ 세계 해양수산업 총 부가가치 ('10) \$1.5조 → ('30) \$3조
- ▣ 해양관광·레저, 수산가공업, 양식업, 해양자원 산업이 성장세 주도

세계 각국은 공격적인 해양전략 수립 시행

- ▣ 중국 : 해양생산액을 '30년까지 GDP 14%까지 확대
- ▣ 일본 : 제2차 해양기본계획 수립·추진
- ▣ 영국 : '20년까지 해양산업 연평균 4%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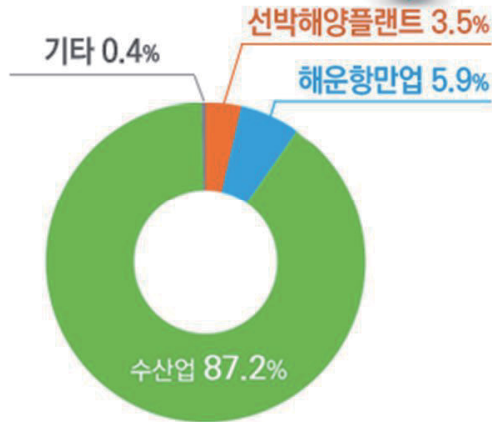
I | 해양수산업 현황

2 산업 현황



사업체 현황

/// 업체수 :
14만 4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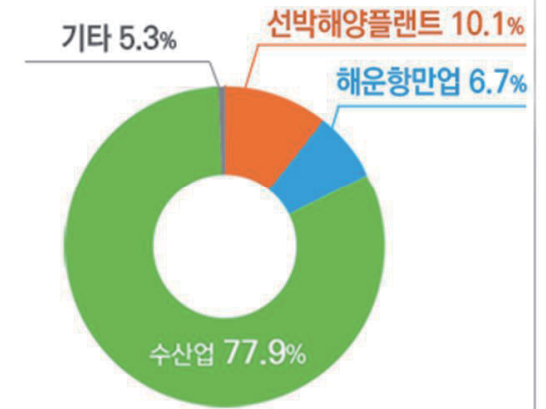
/// 업체규모 : 100인 미만 중소기업 99%

- 300인 이상 대기업은 해운·항만건설업 선박·해양플랜트에 주로 포진



종사자 현황

/// 종사자 수 :
134만명



/// 근로형태 : 상근직 50%, 임시·일용 50%

- 해양분야는 상근 근로자 위주이며, 수산분야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음

I | 해양수산업 현황

3 여건 및 정책 대응방향

해운·항만

- ✔ 한진해운 파산 이후
매출액·선대규모가 대폭 감소
- ✔ 자동화·대형화 등 항만간 경쟁 가중

세계 5위 해운강국 위상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과 항만 스마트화로
경쟁력 강화

수산

- ✔ 양식업은 양적 성장 중이나
연근해 어업은 생산량 감소
- ✔ 단순 가공위주로 부가가치가 낮고,
어업인간 소득도 불균형

적극적인 자원관리, 양식업의 질적 성장,
수산물의 식품산업화

新해양산업

- ✔ 높은 성장세를 보이거나,
해양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
- ✔ 신산업의 특성상 기업 및
매출 규모가 미약

기술 및 자금지원, 컨설팅 등
맞춤형 창업 생태계 조성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일자리 안정화**



新해양산업을 일자리 창출형 산업으로 육성

Ⅲ 정책 추진방향

1

주력 해양수산업의
일 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분야의 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3

「어촌 뉴딜 300」을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Ⅲ. 추진과제

01

주력 해양수산업의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1 해운산업 NEW START와 항만 민간투자 확대
- 2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 3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

1 | 해양수산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1 | 해운산업 NEW START와 항만 민간투자 확대

해운산업 재건 프로그램 운영

- ▶ 해양진흥공사 설립('18.7, 자본금 3.1조원)
→ 50척 신조발주(4.2조원)
- ▶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중복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 ▶ 친환경 대체 건조 보조금 도입('18.1~)
- ▶ '해운-조선-화주' 간 상생방안 본격 추진



항만 민간투자 확대

- ▶ 항만 재개발 본격화
(부산 북항 통합개발, 인천 드림 아일랜드 등)
- ▶ 항만배후단지 민자 유치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 ▶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착수('18. 下)
* 부산 : 해양레저기기 선박 등
* 광양 : 해운물류 R&D 기업

민간 투자



해외 진출 및 스마트 해상물류 실현

- ▶ 한국형 글로벌터미널 운영사(K-GTO)의
아시아권 터미널 운영권 확보 추진
- ▶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항만 개발
* 해외항만개발 특화펀드조성 방안 마련
- ▶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구축
* 자율운항선박-초고속 해상통신망-스마트 항만 연계



1 | 해양수산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2 |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소자본 벤처창업 지원

- ▶ 창업 지원기관 지정('18.2), 지역 특화 창업 지원센터 확대(4 → 5개소)
- ▶ 기업전용 R&D 확대, 창업기업 R&D 의무지원 비율 도입(40%)
- ▶ 수산모태펀드 추가 조성(150억원), 해양모태펀드 신설 검토

청년 귀어

- ▶ 어촌계 가입기준* 개선
* (기존) 수협조합원만 → (개선) 어업인이면 누구나
- ▶ 청년 영어정착금 지원 신설(월 100만원), 창업·주택자금지원('18년, 500억원)

해양신산업 육성

- ▶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연관산업 융복합(강원 고성)
- ▶ 해양바이오 بانک 구축('18.9) 및 상용화 지원
- ▶ 조류·파력 에너지 실해역 시험장 조성

해양심층수	1,500억원	5,000억원
시장 규모	'17	'22
해양바이오	5,500억원	7,800억원

1 | 해양수산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3 | 해양관광레저 산업 육성

마리나 대중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 ▶ 거점 마리나 항만 확충(3개소), 맞춤형 마리나 항로 개발
- ▶ 요트 제조·수리·금융·판매 등 연관 산업 육성
 - *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착수, '18.2), 대형 요트 시제선 건조(100ft급)
- ▶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선정 및 사업추진 전략 수립('18.上)

마리나 등록업체 수



크루즈 산업 재도약

- ▶ 다각적인 Port Sales로 중국편중 구조 다변화(한-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 '18.上 / 3항차)
- ▶ 내국인 수요 창출(관광체험단 확대, 항로개발, 홍보, 시범운항 등)
- ▶ 크루즈 인프라 지속 확충(전용부두 9 → 12선석)

관광콘텐츠 개발

- ▶ 해중경관 시범지구 지정('18.上), 수중레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 태안, 완도 등 4개소를 중심으로 해양치유 Biz모델 개발
- ▶ 해안누리길(53개소)의 테마 코스화(총무공길, 장보고길 등)
- ▶ 안전과 자원관리가 조화된 선진국형 낚시 레저 문화 조성

Ⅲ. 추진과제

02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 1 수산업의 생산 혁신
- 2 수산식품의 수출전략 산업화
- 3 어업외 소득창출과 복지 확대

2 | 어가 소득 5천만원 시대

1 수산업의 생산 혁신

잡는 어업 : 생산량 회복

- ▶ 사라진 어종 되살리기
 - 명태 방류 확대('17년 30만마리 → '18년 100만마리)
 - 자원 감소 어종 회복 추진(낙지 · 주꾸미 등)
- ▶ 어업인 참여형 자원관리체계 구축(휴어제 검토 등)
- ▶ 바다숲('18년 3천ha) 및 바다 목장(5개소) 조성
- ▶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단속
 - 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 투입 및 한중 공동단속 시스템 운영
- ▶ 바닷모래 채취 최소화로 해양생태계 보전
 - 골재 중 바닷모래 비중 축소('17년 11% → '22년 5%)

양식어업 : 스마트화 · 규모화

- ▶ 참다랑어 상업출하, 뱀장어 완전양식기술 조기 산업화
- ▶ 친환경 양식기술 보급 확대(첨단 수처리기술 등)
- ▶ 고수익 품종(김 등) 면허 확대
- ▶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확대(괴산·화순 준공, 추가 1개소)
- ▶ ICT, IoT기반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추진(경남 고성)
 - * 특수목적법인 설립('18. 下, 지역어민·기업·발전소 공동 투자)



2 | 어가 소득 5천만원 시대

2 수산식품의 수출 전략 산업화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육성

- ▶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 목포(예타중), 부산(예타신청 추진)
- ▶ 김 수출 확대('17년 5억\$ → '22년 8억\$), 참치·어묵 등 글로벌히트상품 개발
 - * 어묵산업 발전 방안 마련('18.下)

◆ 김 수출 5억 달러 돌파!



수출 시장 다변화

- ▶ 美, ASEAN, EU 등으로 시장 다변화
 - 해외 현지 수출지원센터 확대 (7개소 → 10개소)
 - 'K-SEAFOOD Global Week' 운영
 - * '18.11월(2주간) / 10~15개 국가 동시 개최
- ▶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한국 수산식품 홍보



수출 인프라 강화 및 제도 정비

- ▶ 활수산물 수출물류센터 확충(3개소)
 - * 부산, 인천, 완도
- ▶ 활어 전용 컨테이너 등 신선유통 설비 확충
- ▶ '수산식품산업발전법' 제정 추진('18,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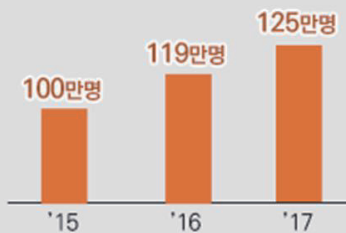
2 | 어가 소득 5천만원 시대

3 어업외 소득창출 및 복지 확충

어촌관광 자원 등을 활용한 소득 창출

- > 경관, 문화 역사를 활용한 어촌테마마을 조성
- '22년까지 전국 10개소 조성
- > 어촌체험마을 서비스 개선
- 숙박 등 서비스 수준을 평가·공개
* 어촌체험마을 112개소
- > 어촌특화지원센터 확대(4개소 → 10개소)
* 창업컨설팅, 상품개발 지원 등

어촌마을 체험객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 > 어가도우미 활성화
* 지원단가 인상(7 → 10만원/일),
자부담율 인하(30 → 20%)
-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운영
* 섬지역, 벽지 어촌 지역에 출장 의료서비스 제공
- > 가사도우미 신규 지원
* 어촌거주 65세이상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가구, 경로당 등
- > 도서민 교통권 확보
-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 도서민 운임지원

경영 안전망 강화

-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55 → 60만원/년)
* 8km이상 떨어진 도서 → 전도서
- > 어업용 토지 양도세·취득세 감면
- > 수입보장보험 도입 추진
('18년 시범사업 착수)
- > 양식재해보장 보험 확대
- > 어선원보험 가입대상 확대
(어선 4톤이상 → 3톤이상)

Ⅲ. 추진과제

03

「어촌 뉴딜 300」을 통해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 추진 필요성

2 사업유형

3 추진방안

4 기대효과

3 | 어촌 뉴딜 300

1 추진 필요성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대형 SOC는 선진국 수준으로 완비

* 세계경제포럼(WEF)의 137개국 인프라 수준 평가(17.9월)결과 우리나라는 도로 12위, 철도 7위, 항공 13위, 항만 23위

✓ 반면,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생활공간이자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매우 낙후

* 소규모 항·포구(1,294개)의 개소당 연평균 투자액은 5천만원에 불과

접안시설 파손



대합실 미비



구조정 계류시설 미비



안전시설 노후화



▶ 「어촌 뉴딜 300」 추진으로 소규모 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

3 | 어촌 뉴딜 300

2 사업 유형

해상교통시설 정비형

▶ 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및 현대화

* 여객선 기항지 총 340개소(소규모 항포구 기항지는 170개소)

- 접안시설 보강, 수심확보, 정온도 개선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투자로 효과 극대화

▶ 여객 편의 시설 확충 (대합실, 화장실 등)



해양재난사고 대응형(해경 협력)

▶ 연안구조정 전용 접안시설 설치

* 전체 95개소 중 전용 접안시설 미확보 72개소 대상

▶ 출동 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 등 추진



3 | 어촌 뉴딜 300

2 사업 유형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형

- ▶ ICT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구축 및 안전난간, 인명구조함, 구명사다리 보강
→ 이용자가 많은 어항 · 항포구부터 우선 추진
- ▶ 친수시설 및 어항 · 항포구 안전점검 시행(연 1회 이상)
* 법령정비를 통해 안전점검 의무화 추진



어촌관광 수요 창출형

- ▶ 레저선박 전용 계류시설 확충
- ▶ 유서깊은 항·포구 복원을 통한 관광명소화
* 소규모 역사 문화관 건립, 나루터 복원(어린진, 법성포 등)
- ▶ 바다가꿈 프로젝트
* 소공원 조성, 어구창고 등 어촌 · 어항의 경관 개선



3 | 어촌 뉴딜 300

3 추진방안

해수부, 해경, 어촌어항협회,
해운조합 등 합동 T/F 운영

300개 선도대상 선정
(유형별 우선순위 선정)

단계적 현대화 및
성과 확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 뉴딜 300」 종합계획 마련('18.上)

4 기대효과

어촌주민·관광객의
해상교통 안전 확보

+

어촌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 등
사업기회 확대)

+

소외지역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2018년을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의 GDP 비중

6.4% ('14)



10% ('30)

구분	'16년	'18년	'22년
해운산업 매출액	29조원	30조원	50조원
항만인프라 민간투자	1.3조원	2.2조원	2.9조원
마리나 서비스업	69개	110개	400개
수산물 수출	21.3억불	27억불	40억불
어가소득	4.7천만원	5천만원대	6천만원대
연근해 어획량	93만톤	100만톤	110만톤